
인천자활사업 공공일자리 확대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중심으로 -

■ 일 시 2019년 7월 11일(목) 15:00

■ 장 소 인천문화예술회관 회의장

■ 주최주관  인천광역지활센터  인천지역자활센터협회

행 사 일 정 표

시 간	내 용	세 부 내 용
15:00~15:10	개 회 식	사회자 : 이진희 인천광역시자활센터 사무국장 국민의례 내외빈 소개, 좌장, 발제자, 토론자 소개 개회사 : 한숙희 인천광역시자활센터장 인 사 : 최윤희 사)인천지역자활센터협회장 축 사 : 정연용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장
15:10~16:00	기조발제	인천시 사회적경제 현황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한 자활기업 활성화 방안 제언 김용구 인천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장 서울시 사회적경제 공공기관, 공공일자리 사례와 확대 전략 이은애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16:00~16:10	Coffee Break	「인천동구지역자활센터 카페사업단」  달콤한 머핀과 시원한 음료를 준비했습니다^^
16:10~17:00	종합토론	좌장 권정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 김도균 사)인천지역자활센터협회 부회장 이혜란 인천자활기업협회 부회장 이임철 SK인천석유화학(주) DBL 정책혁신팀장 안미현 중앙자활센터 자립기반팀장 김성준 인천광역시의원
17:00~17:30	질의응답	참석자
17:30~18:00	폐 회	폐회 및 기념촬영

목 차

I. 기초발제

1. 김용구(인천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장) 3
2. 이은애(서울시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27

II. 종합토론

1. 김도균(인천지역자활센터협회 부회장) 43
2. 이혜란(인천자활기업협회 부회장) 49
3. 안미현(중앙자활센터 자립기반팀장) 55
4. 이임철(SK인천석유화학(주) DBL 정책혁신팀장) 59
5. 김성준(인천광역시의원) 63

[기조발제 I]

인천시 사회적 경제 현황과 활성화 방안

[김용구 인천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장]

인천 광역자활센터 토론회
2019.07.11



인천시 사회적 경제 현황과 활성화 방안

김용구 (경영학 박사, 인천대학교 경영학과 겸임교수)
사)흥익경제연구소 센터장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인천권역 통합지원 기관)

INDEX

Chapter I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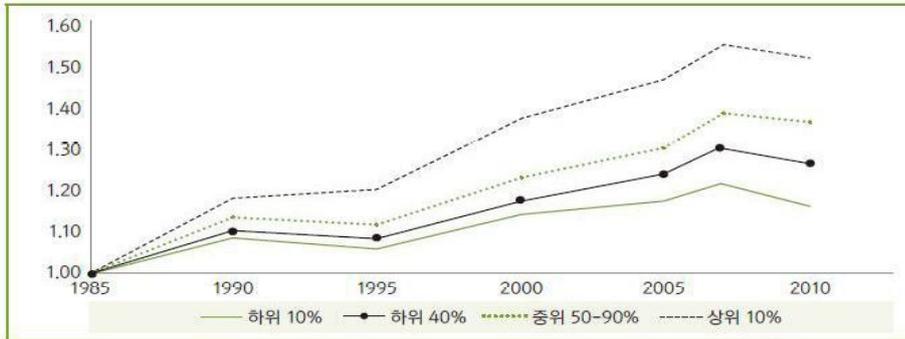
Chapter II 인천시 사회적경제 현황

Chapter III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언



▪ 소득 불평등

- 상위 10% 소득이 하위 10% 소득에 약 10배 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그 차이는 30년 전에 비해 약 7배 정도 증가(2016년 OECD 보고서)



자료 : OECD(2015), Employment Outlook 2014.

- 1985년 1.00 기준으로 2010년 상위 10%의 실질소득은 55% 증가하고 있는 반면, 소득 하위소득 10% 성장(OECD 평균소득분위별 실질가구소득)
- 세계 인구의 최상위 1% 계층이 전 세계 재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나 세계 인구의 절반은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
- 국민소득 중 자본소득의 비중이 높아지고 노동소득의 비중이 낮아짐에 따라 불평등이 심화.
- 노동소득이 1% 감소할 때 시장소득의 불평등도는 0.1~0.2%의 증가(OECD의 보고서)

▪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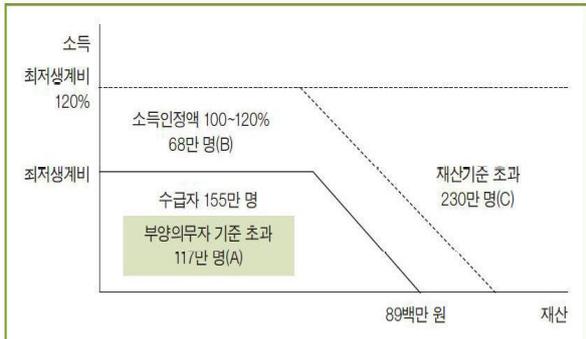
- 상위 10% 평균실질소득은 가파르게 증가, 하위 10%의 평균 실질소득은 IMF 이전보다 감소
IMF 이후 상위 10% 소득자와 상위 1% 소득자의 소득 점유율이 1.5~2배 가까이 증가
(김낙연, 김종일, 「한국 소득부내지표의 재검토」, 『한국 경제의 분석』 19, 2, 2013. 홍민기, 「불평등 지표 개선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6년)
- 2016년부터 소득불평등도가 급격히 심화되고 있으며 소득불평등도는 당분간 계속 높아질 것으로 전망. (조재호, 「우리나라 7대 광역시 도시가구의 소득불평등에 대한 실증적 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1권 제4호, 2018년)
- 크레딧 스위스(Credit Suisse)의 국가별 상위 10% 자산불평등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상위 10%가 차지하는 자산비율은 2000년 53.2%에서 2014년 62.8%으로 증가하여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에도 더 빠르게 증가
- 소득불평등은 사회응집력, 행정능력, 민주적 절차 및 가치를 감소
- 소득불평등 수준이 1% 증가하면 일자리 성장이 정체될 가능성이 20% (리처드 플로리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빈곤층에 대한 정책을 실행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 되었음. 수급을 받는 사람을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부양의무자 기준은 1촌 이내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부양의무자로 설정
- 소득인정액 기준을 설정하여 재산을 소득으로 간주하고 있음. 이 재산의 소득환산으로 인하여 빈곤층 가구의 경우 실제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기초생활보장에 문제
- OECD 기준 우리나라 빈곤층은 309만 명으로 파악(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65만 명, 비수급 빈곤층' 93만 명과 중위소득 대비 40~50% 소득자 51만 명을 합친 144만)
- 빈곤층 570만명 추산(기초생활수급자 155만명+ 415만명)



- 기초생활수급자 : 155만 명
-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117만 명(A)
- 소득인정액 68만 명(B)
- 재산기준 초과: 230만명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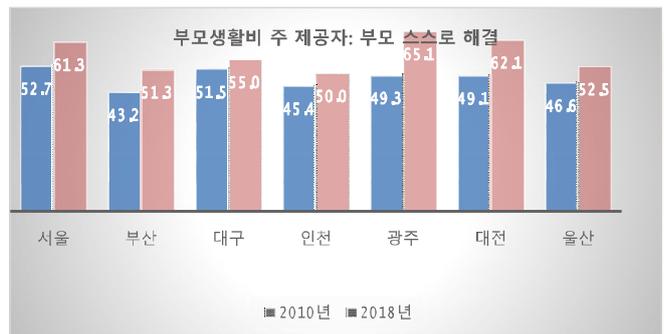
A+B+C= 415만 명

자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형 포용적 성장의 방향과 과제, 2016.

■ 기초생활수급가구와 비수급 가구 소득 비교

구분	수급 가구*	비수급 가구	
		기준 중위소득 ~30%	기준 중위소득 30~40%
총소득*(만원/월)	95.7	50.3	68.1
경상소득*	95.2	49.3	67.7
시장소득 + 타 정부보조금	45	46.8	66.9
시장소득	23.7	23.3	46.5
총 재산(만원)	2,578	2,819	2,950
거주 재산	2,266	2,372	2,458

자료: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2017.7.31.



자료: 통계청



비수급 가구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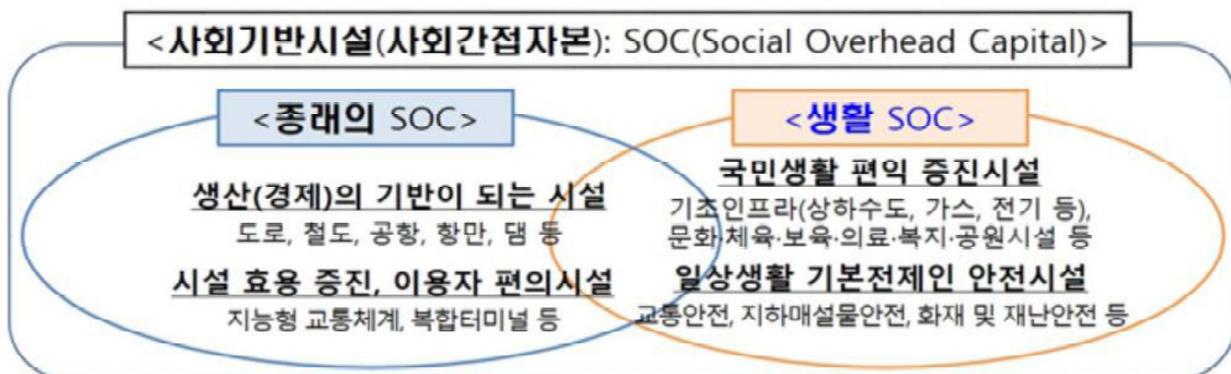
■ 사회적 경제 조직

-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제공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1항)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
- **마을기업**: 지역 주민이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 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
- **자활기업**: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공동사업자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소셜벤처**: 개인 또는 소수의 기업가가 사회문제를 해결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해 설립한 신생기업
- **협동조합**: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항)
-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주민들의 권익,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3호)



배경

■ 생활 SOC란?



- 성장위주의 인프라 투자를 통해 국민소득은 3만불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취약한 생활 인프라 등으로 인해 국민이 일상 생활에서 체감하는 삶의 질은 미흡
- “국가최소수준” 적용, “지방주도-중앙지원” 등 새로운 접근방법을 통해 수립
- 2022년까지 생활soc 시설들을 대폭 확충하여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3대 분야 8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추진

자료: 생활 soc 3개년 계획(안), 관계부처 합동, 2019.4.15

배경

비전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사는 대한민국

목표

'22년까지 국가 최소수준 이상의 핵심 생활인프라 구축

3
대
분
야
·
8
대
핵
심
과
제

01 여가 활력

활기차고 품격 있는 삶터

- 1 공공체육인프라 확충 (국민체육센터, 실외체육시설)
- 2 문화시설 확충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꿈꾸는 예술터)
- 3 취약지역 기반시설 확충 (도시재생, 농산어촌개발, 여촌뉴딜)

02 생애 돌봄

따뜻하고 건강한 삶터

- 4 어린이 돌봄 시설 확충 (어린이집, 유치원, 온종일 돌봄체계)
- 5 취약계층 돌봄 시설 확충 (노인요양시설, 고령자복지주택)
- 6 공공의료 시설 확충 (지역책임의료기관, 주민건강센터)

03 안전·안심

안전하고 깨끗한 삶터

- 7 안전한 삶터 구축 (교통, 지하매설물, 화재 및 재난 안전)
- 8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미세먼지저감술, 휴양림, 아영장)

자료: 생활 soc 3개년 계획(안), 관계부처 합동, 2019.4.15

배경

■ 생활 soc 공급 목표

구분	17.12월 기준)	'22년(착수기준)	구분	(18.12월 기준)	'22년(착수기준)
수영장	406개 (1개소당 12.6만명)	600여개 (1개소당 8.5만명)	생활문화센터	141개 (시군구당 0.6개소)	300여개 (시군구당 1.3개소 이상)
체육관	963개 (1개소당 5.3만명)	1,400여개 (1개소당 3.4만명)	메이커스페이스	65개	360여개
야구장	269개 (1개소당 19만명)	400여개 (1개소당 13.7만명)	국·공립 어린이집	3,602개 (20만명)	5,700여개 (33.6만명)
노인건강 (게이트볼장)	1,479개	1,600여개	직장어린이집	1,111개 (6.2만명)	1,600여개 (8.5만명)
레저스포츠 (인공암벽장)	39개	50여개	다함께 돌봄센터	17개 (0.4천명)	1,800여개 (9만명)
공공도서관	1,042개 (1개소당 5만명)	1,200여개 (1개소당 4.3만명)	초등 돌봄교실	12,398실 (26.1만명) ※ '18.4월 기준	15,000여실 (약 31만명)
작은도서관	6,058개 (1개소당 8.5천명)	6,700여개 (1개소당 7.6천명)	공립요양시설	110개 (78개 시군구거주자)	240여개 (226개 시군구거주자)
			고령자 복지주택	2,426호 (20개 시군구거주자)	4,000여호 (4개 시군구거주자)
			주민건강센터	66개	110여개
			건강가정지원센터	독립 24개, 통합 183개	통합 230여개 (24개 기능보강 포함)

▶ 배경

■ 노인 여가 복지시설, 독거노인 가구 비율



자료: 통계청

▶ 배경

■ 공공 문화 체육시설



■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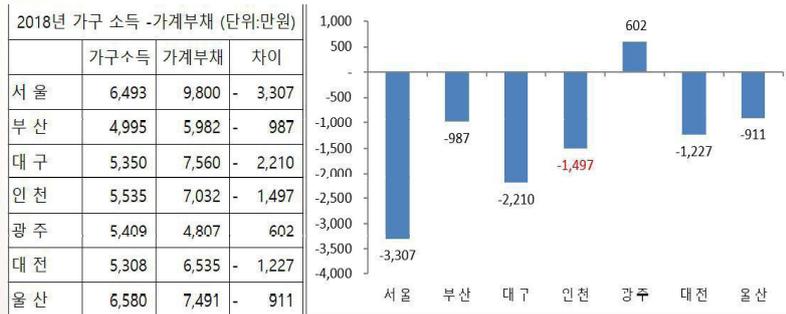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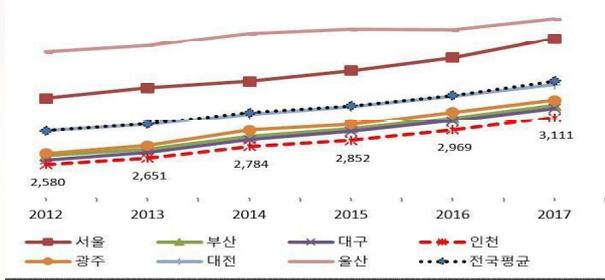
	도서관 수(관)	1관당 평균 좌석수(석)	1관당 결산 예산액(백만원)	1관당 직원 수(명)	1관당 평균 도서(인쇄) 수(권)	1관당 방문자 수(명)	1관당 자료 구입비(백만원)
서울	160	282	1,021	15	84,278	401,554	101
부산	40	434	1,077	17	136,645	412,363	128
대구	36	384	899	13	113,209	349,643	105
대전	48	379	994	17	88,426	297,194	86
인천	23	480	1,228	20	108,480	276,266	95
광주	24	425	1,010	15	115,188	284,936	86
울산	5	172	421	7	48,627	111,804	133

자료: 통계청

배경

■ 근로소득, 가구소득-가계부채

근로소득자 연도별지역별 평균 급여(단위: 만원)



자료: 국세청,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

배경

■ 사회적 고립도



자료: 통계청

-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없음
2011년 26.1%, 2017년 23.0% (인천시 2위)
- 갑자기 많은 돈을 빌려야 할 경우-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없음
2011년 53.9%, 2017년 50.3% (인천시 2위)
-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없음
2011년 21.2%, 2017년 18.9% (인천시 2위)



인천시 성별 사회적 고립도

배경

■ 사회단체 참여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사회단체 참여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친목 및 사교단체		종교단체		취미, 스포츠 및 여가 활용단체		시민사회단체		학술단체		지역사회모임		광역시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1-2017 차이
	2011	2017	2011	2017	2011	2017	2011	2017	2011	2017	2011	2017									
서울시	70.6	72.4	32.9	35.2	38.9	50.1	9.1	9.9	6.7	9.5	8.0	9.4	서울특별시	206,808	199,310	201,958	206,687	258,427	267,023	263,347	56,539
부산시	72.8	86.2	27.5	22.3	38.6	30.5	12.0	5.8	5.2	3.1	9.4	8.3	부산광역시	141,597	135,973	130,835	120,902	152,389	149,528	145,113	3,516
대구시	81.3	84.5	21.7	21.5	28.1	30.3	8.9	5.6	2.2	3.9	4.8	3.5	대구광역시	104,532	99,473	96,803	93,539	113,152	107,763	103,132	-1,400
인천시	69.6	83.0	32.8	24.9	36.5	35.8	12.1	5.0	5.0	4.5	6.3	6.1	인천광역시	71,700	70,860	70,984	72,113	97,334	100,301	98,789	27,089
광주시	79.3	80.3	22.4	22.6	28.8	45.3	9.3	9.0	4.6	4.5	6.6	9.3	광주광역시	62,482	60,684	59,962	59,598	71,683	69,420	65,712	3,230
대전시	68.0	73.5	31.9	32.7	34.4	46.9	15.1	10.0	7.6	8.3	6.8	7.8	대전광역시	46,549	44,992	44,066	43,469	53,930	54,490	52,357	5,808
울산시	77.5	85.2	23.2	24.9	38.5	49.7	12.9	11.6	2.5	2.9	10.7	10.5	울산광역시	17,191	15,804	15,353	15,363	21,375	18,776	18,821	1,630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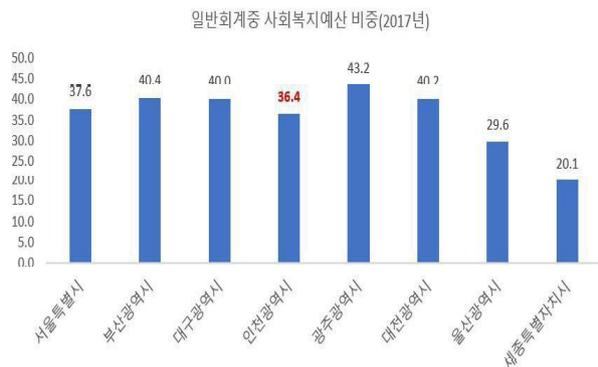
- 인천시 친목 및 사교단체 참여율은 2011년 69.6% 에서 2017년 83.0% 로 증가
- 종교단체 참여율은 32.8% 에서 24.9% , 시민사회단체 참여율은 12.1% 에서 5.0% 감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 2011년 71,700명에서 2017년 98,789명으로 27,089명 증가

배경

■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사회복지 예산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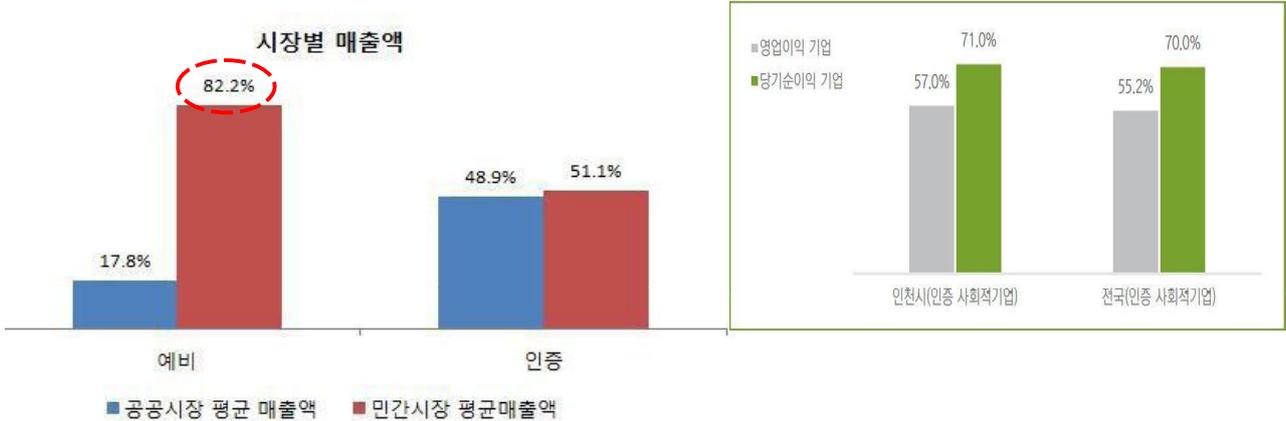
	사회복지전담 공무원현황(2017년)					
	정원		현원		사회복지사	
	소계	소계	1급	2급	3급	
서울특별시	4,232	4,151	2,458	1,658	35	
부산광역시	1,538	1,512	944	566	2	
대구광역시	1,096	1,070	641.5	425.5	1	
인천광역시	1,041	897	542	349	6	
광주광역시	697	664	365	299	-	
대전광역시	567	524	341	183	-	
울산광역시	325	322	191	131	-	
세종특별자치시	83	85	45	40	-	

자료: 통계청



인천시 사회적 경제 현황

■ 사회적 기업 매출



- 예비사회적기업
민간시장 82.2% , 공공시장 17.8% 에서 매출
- 인천시 인증사회적기업(107개소) 전국 인증사회적기업(1008개소)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비교
영업이익 인천 57.0% > 전국 55.2%
당기순이익 인천 71.0% > 전국 70.0%

자료: 2017년 기준, 홍익경제연구소, 단위: %

인천시 사회적 경제 현황

■ 사회적기업 업종별 매출 현황

업종	매출 합계	평균 매출
제조	40,309,798	1,679,575
세탁	4,150,488	1,383,496
도소매	8,462,539	1,208,934
재활용	8,343,487	1,191,927
청소	22,260,198	967,835
간병가사	8,888,470	888,847
스포츠	1,416,011	708,006
건설	5,309,035	589,893
교육	8,104,596	506,537
식품	5,642,598	376,173
IT	1,092,707	364,236
광고	540,936	270,468
문화예술	5,340,101	254,291
미용	198,489	198,489
기타	795,087	159,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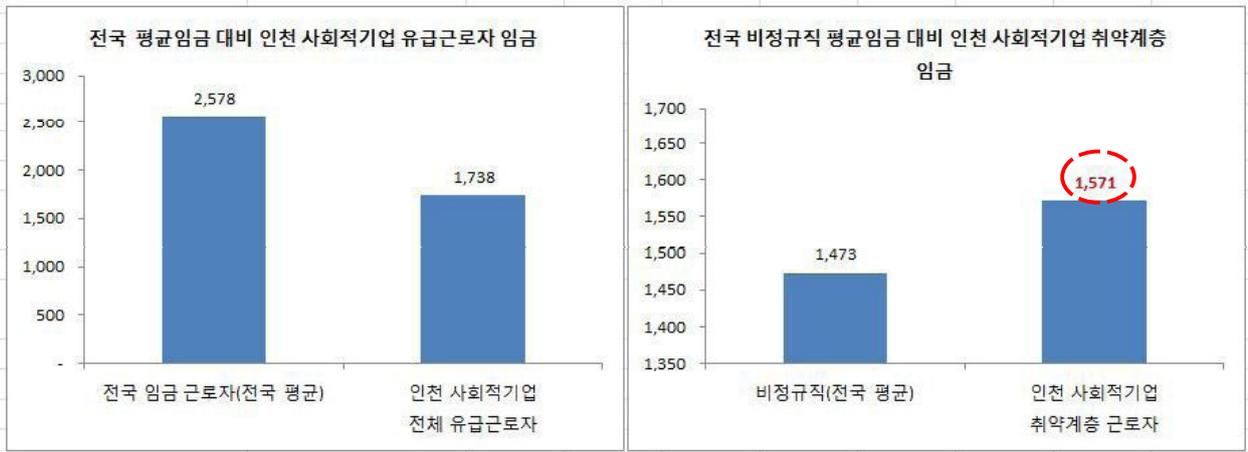
군구	평균 매출액
서구	▲ 1,487,146
남동구	▲ 1,173,483
계양구	▬ 849,307
중구	▬ 832,377
부평구	▬ 621,389
연수구	▬ 607,558
강화군	▬ 604,356
미추홀구	▬ 481,261
동구	▼ 338,703
옹진군	▼ 179,561

자료: 2017년 12월 기준, 홍익경제연구소, 단위: 천원

- 제조, 세탁, 도소매, 재활용, 청소, 간병가사 업종 평균매출액 보다 높은편
- 평균매출액 816,585천원 민간시장 55% , 공공시장 45%
- 서구, 남동구 평균 매출액 높은편

인천시 사회적 경제 현황

■ 전국 임금 대비 사회적 기업 임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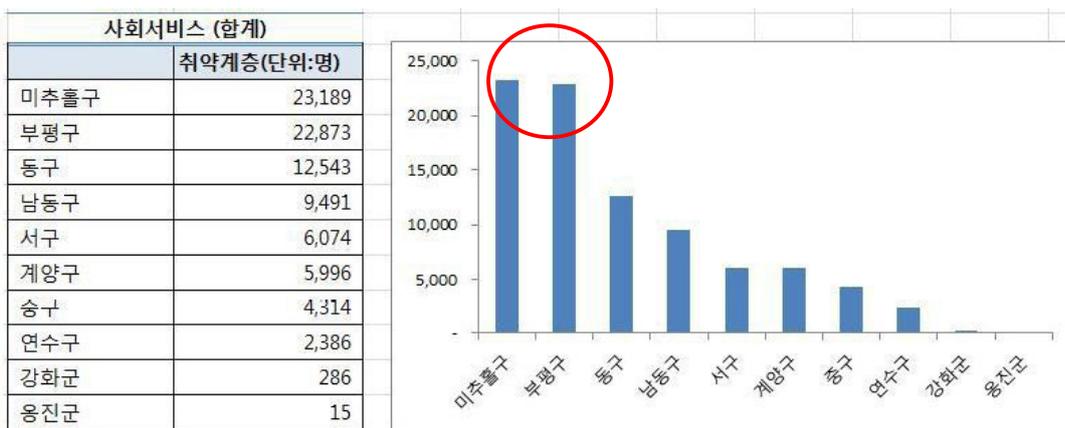


자료: 2017년 기준, 홍익경제연구소, 단위: 천원
고용노동부

- 전국 평균임금 대비 사회적기업 유급근로자는 낮음
-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임금은 전국 비정규직 평균보다 높음
- ❖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사회서비스 제공 - 사회적기업 중요성

인천시 사회적 경제 현황

■ 사회적 기업 사회서비스 현황



자료: 2017년 기준, 홍익경제연구소, 단위: 명

- 미추홀구, 부평구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실적 높음
- 서구, 계양구, 중구, 연수구 등 낮음
-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이 낮음 - 사회적기업 ?

인천시 사회적 경제 현황

■ 기업 재무분석

- 재무분석은 재무제표 상의 서로 대응하는 항목을 분류하여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분석·비교·평가하는 것을 말함
- 유동성 비율은 기업의 단기채무 상환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율
- 안정성 비율은 자본구조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비율로 부채성 비율
- 수익성 비율은 일정기간 동안 경영활동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비율
- 성장성 비율은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규모 및 경영성과가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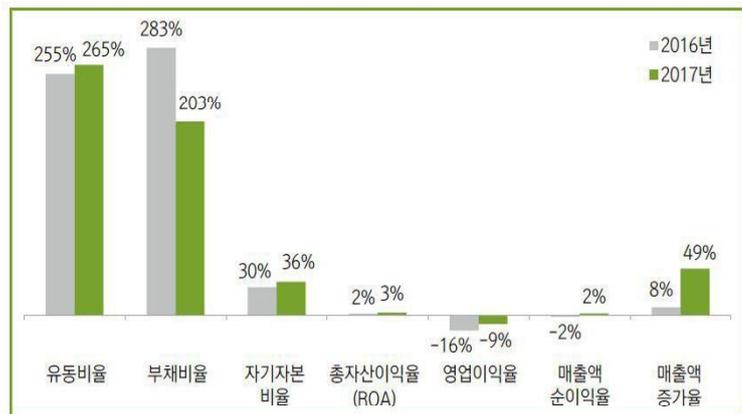
분류	의미	비율
유동성 비율	기업의 단기채무상환능력을 측정	유동비율, 당좌비율
안정성 비율	기업의 장기채무 상환능력과 자본구조의 안정성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고정비율, 고정장기적합률
활동성 비율	자산의 효율적 이용도 측정	재고자산회전율, 매출채권회전율, 총자산회전율
수익성 비율	투자자본에 대한 경영성과와 기업의 이익창출능력을 측정	총자산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 매출액이익률
성장성 비율	기업의 규모 및 경영성과의 증가를 측정	매출액증가율, 총자산증가율, 자기자본증가율, 순이익증가율

자료: 김준우 · 김용구 · 전동진, 『엑셀을 활용한 경영분석』, 북넷, 2013

인천시 사회적 경제 현황

■ 인증 사회적기업 재무분석

- 인천광역시 인증사회적기업
- 유동성 비율은 증가하고 부채비율은 감소 자기자본비율은 증가하여 양호.
- 영업이익율이나 매출액순이익율도 증가하였고 매출액 또한 크게 증가함



자료: 2017년 기준, 흥익경제연구소

인천시 사회적 경제 현황

■ 인증 사회적기업 재무분석

단위:%

	경영 분석	인천 전체 산업	인천 제조업	인천 인증사회적기업1)
성장성 지표	매출액 증가율	9.5	8.8	49.4
	총자산증가율	7.3	2.5	29.5
수익성 지표	매출액 영업이익율	6.4	4.3	-8.6
	매출액세전 순이익율	4.5	3.5	2.2*
안정성 지표	부채비율	140.0	121.1	203.4
	자기자본비율	41.7	45.2	35.9

자료: 한국은행 인천본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인천권역지원기관 사)홍익경제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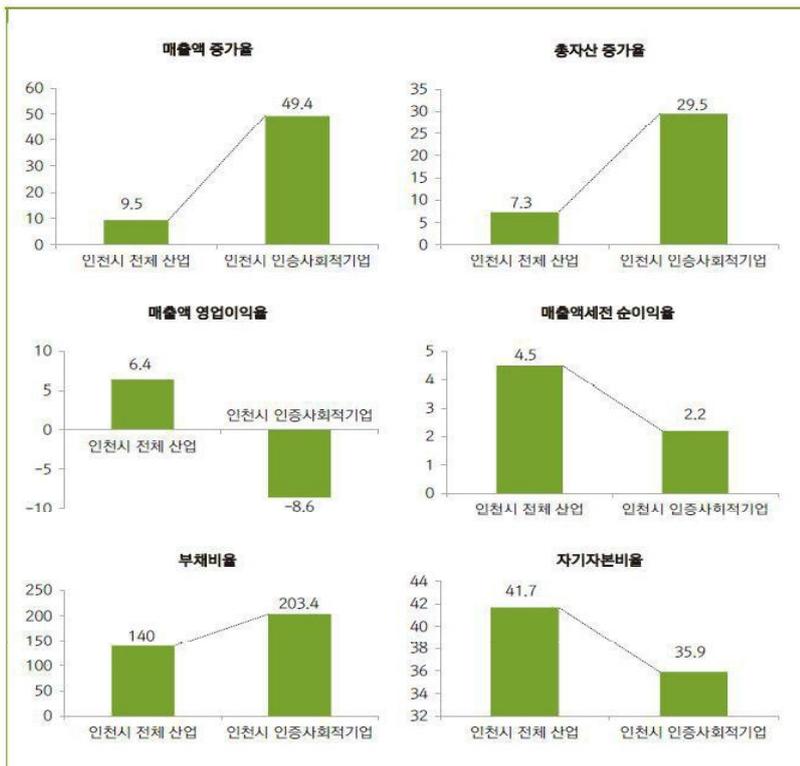
인천기업 2017년 비금융영리기업 인천 전체 산업, 제조업

1) 인증사회적기업: 2017년 99개소 기준(인증 사회적기업증 재무제표 이상 기업 7개 제외)

* 인천사회적기업, 인증사회적기업은 매출액(세후)순이익율

인천시 사회적 경제 현황

■ 사회적기업 재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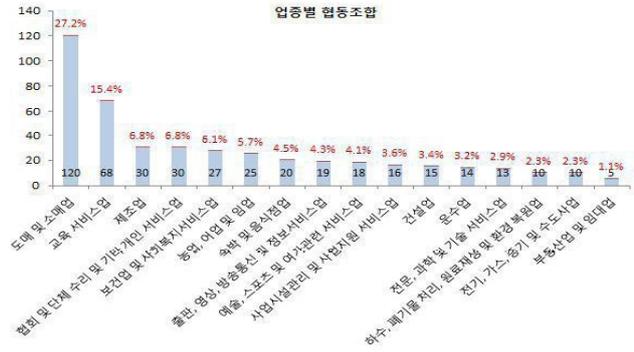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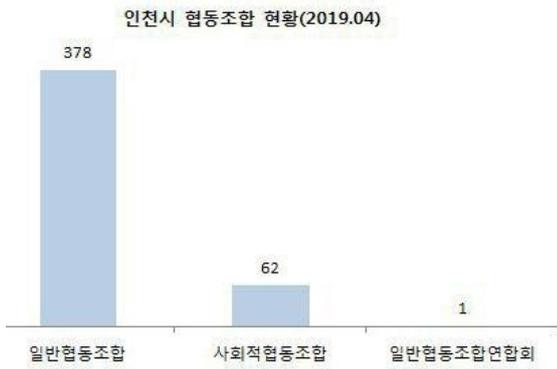


- 인천시 사회적기업은 전체 산업과 비교했을 때 성장성 지표는 높으나 수익성 지표와 안정성 지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사회적기업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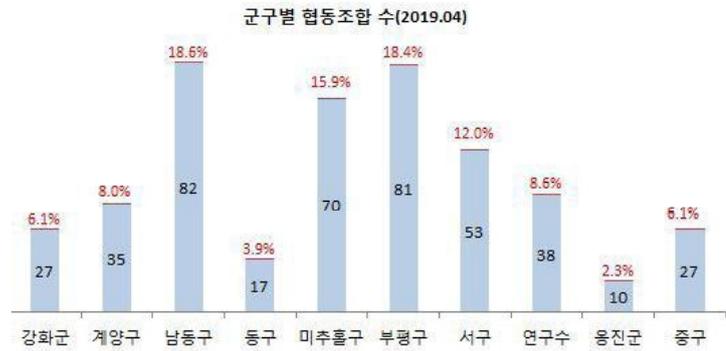
자료: 2017년 기준, 홍익경제연구소,

인천시 사회적 경제 현황

■ 인천시 협동조합 현황



자료: 기획재정부, 흥익경제연구소



인천시 사회적 경제 현황

■ 자활기업 현황

유형별 현황(2017)

구분	기업 수	참여인원(명)	매출(억원)
지역자활기업	1,055	7,316	1,602
광역자활기업	34	1,153	-
전국자활기업	3	5,685	1,615

업종별 현황(2017)

구분	청소 /소독	집수리	돌봄 (간병)	음식 /도시락	폐자원 재활용	서비스 /세차	기타	계
개소	258	184	144	98	42	30	299	1,055
비중	24.5%	17.4%	13.6%	9.3%	4.0%	2.8%	28.3%	100%

고용 규모별 현황(2017)

구분	5인 이하	6인 이상 ~ 10인 이하	11인 상 ~ 30인 이하	31인 이상 ~ 50인 이하	51인 이상 ~ 100인 이하	100인 이상	계
개소	782	144	95	20	6	8	1,055
비중	74.1%	13.6%	9.0%	1.9%	0.6%	0.8%	100%

자료: 한국자활기업협회, 문재인정부 2년 평가와 과제, 민주연구원

인천시 사회적 경제 현황

■ 인천시 사회적경제 현황(2017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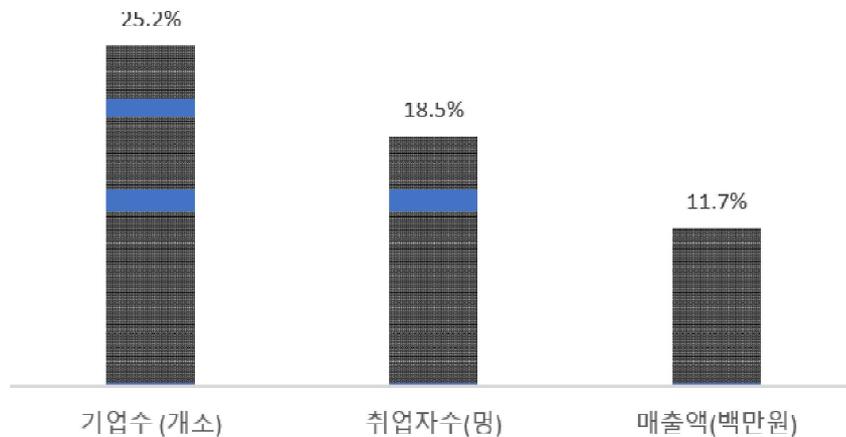
구분	기업수 (개소)	취업자수 (명)	매출액 (백만원)
사회적기업	147	2,596	134,965
마을기업	60	614	5,872
협동조합	440	2,009	39,069
자활기업	37	481	15,774 (사회적기업 중복)
인천시 (B)	196,705	1,242,000	84,059,372
사회적 경제 (A)	0.3%	0.5%	0.2%

자료: 사)홍익경제연구소, 인천시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최종보고, 인천 광역자활센터

인천시 사회적 경제 현황

■ 인천시 자활기업 비중

사회적기업승에서 자활기업 비중



자료: 사)홍익경제연구소, 인천광역자활센터

인천시 사회적 경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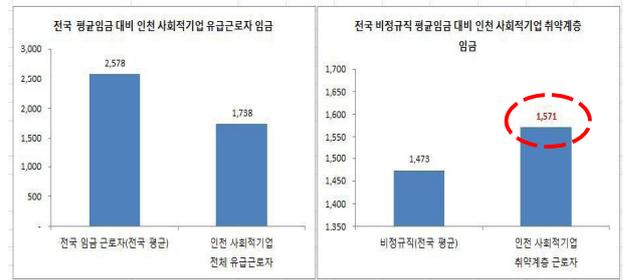
■ 사회적 경제 중요성

- 2017년 인천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고용률 66.9% (전국평균 60.9%)

총유급 근로자	2,596	비율	
취약계층 근로자	1,738		66.9%
비취약계층 근로자	858		33.1%

구분	인증	예비
총유급 근로자	2,310	286
취약계층 근로자	1,583	155
비취약계층 근로자	727	131

- 인천 사회적기업의 임금은 전국 임금근로자 67% 저임금 근로자 경우 사회적기업 6.2% (9.8천원) 더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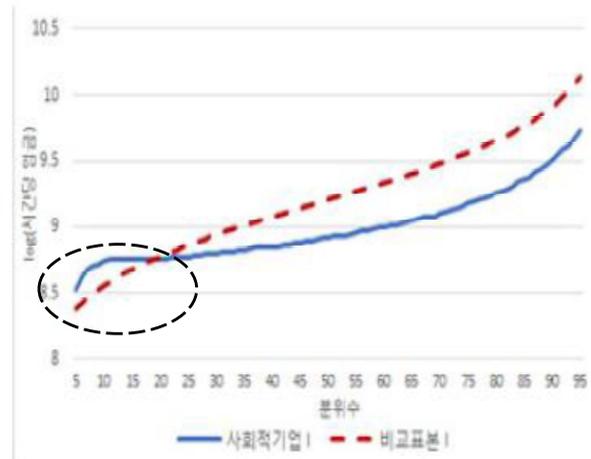
- 취약계층별로 보면 고령자 68.0%, 장애인 15.5%, 저소득자 9.0%, 북한이탈주민 2.3%, 청년/경력단절 여성 2.2%, 한부모가정 0.9%, 55세 이상 53.8%
-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는 시기에 사회적경제가 정책 중요성

자료:홍익경제연구소, 고용노동부

인천시 사회적 경제 현황

■ 사회적 경제 중요성

- 사회적기업 임금실태



- 사회적기업의 임금수준이 일반기업보다 낮으나 저임금 근로자(하위22%)에 대해서는 더 높음
- 고임금 직업과 저임금 직업 사이의 임금격차가 일반기업 보다 적고 성별 임금격차도 적음
- 황덕순(2012), 돌봄서비스 종사자 비영리부분이 영리부분에 비해 후생복지 제공 수준이 높음
- 길현중(2014), 협동조합 근로자들이 소규모 사업체 근로자보다 자율성, 권한, 인간관계, 공정성에서 더 높은 만족도
- 남윤철(2018), 사회적기업은 85.1% 이고 일반기업 67.5% 로 정규직 비중이 높음
- 고용형태에 따른 4대 보험 가입율을 보면 비정규직근로자(특수형태제외)는 69.6% 이나 사회적기업 근로자는 97.0%
-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가치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자료: 사회적기업의 임금 실태와 저임금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5
2015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 고용노동부, 2016년

황덕순·윤자영·윤정향, 「사회서비스 산업 노동시장 분석 -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2012
길현중·안주협, 「협동조합 고용실태와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14
남윤철·진정란·김원섭, 「사회적기업 일자리 질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노동연구』 제36집,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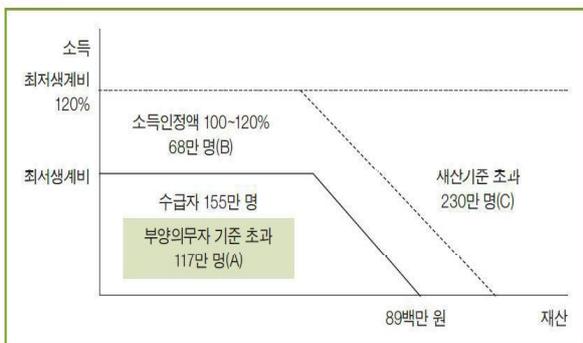
▶ 사회적 경제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언

1. 자활기업 활성화
2. 공공부분 일자리 확대
3.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조직(인천형 경북종합 상사)
4. 사회적 가치 확산과 상생협력

사회적 경제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언

1. 자활기업 활성화

-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서 자활기업 중요성
- 사회적기업 효시와 사회적기업에서 높은 비중
- 공공정책과 연계한 자활기업 분야 확대



자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형 포용적 성장의 방향과 과제, 2016.

- 기초생활수급자 : 155만 명
-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117만 명(A)
- 소득인정액 68만 명(B)
- 재산기준 초과: 230만명 (C)

A+B+C= 415만 명

사회적 경제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언

2.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 생활 SOC 공급에 따른 공공 일자리 확대

- 공공체육: 체육관, 수영장, 노인건강 게이트볼
- 생활문화: 공공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 자녀돌봄: 공공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 다함께 돌봄
- 취약계층: 공공요양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 안전: 교통, 화재, 재난

■ 다함께 돌봄 강화

- 공공시설(주민자치센터, 복지관, 도서관 등),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돌봄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의 경우는 아파트 주민 주도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운영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3항 주민공동시설의 정의, 제55조의2 제 2항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대상에 ‘다함께 돌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 필요
- 인천시 돌봄 지원 관련 조례와 인천광역시 돌봄지원센터 필요

사회적 경제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언

2.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1년 이내 취업·창업 비희망 사유 (단위: 천명, %)

	2018. 8					
	1년 이내 취업 창업 의사 없음		남자		여자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전체〉	13,466	100	4,463	100	9,004	100
결혼, 임신, 출산	67	0.5	0	0	67	0.7
육아, 자녀교육 및 가족돌봄	1,312	9.7	24	0.5	1,288	14.3
가사	3,588	26.6	36	0.8	3,552	39.4
연로	2,549	18.9	1,202	26.9	1,347	15
심신장애	422	3.1	200	0	150	1.7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건강문제	1,241	9.2	598	13.4	644	7.1
통학(학업) 진학준비	3,461	25.7	1,826	40.9	1,635	18.2
일자리(일거리)가 없어서*	294	2.2	178	4	116	1.3
수입이 있어서**	336	2.5	187	4.2	148	1.6
창업 준비(비용, 아이템 등) 부족	33	0.2	16	0.4	16	0.2
기타	165	1.2	130	2.9	35	0.4

*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원하는 임금수준 근로조건에 맞는 일자리(일거리)가 없어서,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자리(일거리)가 없어서 등이 포함

** 배우자 등 가족의 수입이 있어서, 연금, 임대료 등의 수입이 있어서 등이 포함

자료: 통계청

▶ 사회적경제 제품 판로확대를 위한 제언

3. 사회적경제 판로지원조직 인천형 “경북종합 상사” 구축

- 사회적경제기업의 시장개척 · 판로확보를 위해 민관협력
- 당사자 조직 중심과 인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인천권역지원기관, 마을기업 지원기관, 공정무역단체협의회, 광역자활센터, 사회적기업활성화네트워크 등 가입
- 공공구매 수요기관 파악, 공공구매 상담회, 연간목표 공표
- 민간부문 사회적경제 제품 소개 및 가치 소비 캠페인
- 사회적경제 제품 소개 사회적경제 제품 우수기관 평가/포상
- 조직: 사회적협동조합

인천환경관리공단 사회적경제 기업과 공공구매 상담회

인천환경공단은 인천중소벤처기업청 및 (사)홍익경제연구소 등과 공동으로 27일 공단 대회의실에서 인천 지역 하수 분뇨 소각 등 환경기초시설 분야 우수 기술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 74개 업체를 초청해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매 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8일까지 이어지며, 환경분야 및 기술창업 중심의 우수 중소기업 74개사와 맞춤형 정보교환을 통해 주요 생산 제품 구매 협력 및 상담을 진행한다. 뉴시스 2019.02.27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사례 : 경북종합상사

■ 경상북도 사회적기업 종합상사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의 시장지원과 판로개척을 위한 당사자 공동체

규모의 경제와 전문성 지원을 위한 자조조직(Self-help Group)

전략적 투자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전문가 그룹



- 경북종합상사: 사회적기업의 시장개척 · 판로확보를 위해 민관협력 모델
- 조직: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경제 제품 판로확대를 위한 제언

인천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및 가이드라인 제정

2019년 4월 17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104 호

인천광역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지원 및 기업의 사회적책임 평가 등을 통해 공공조달에 있어 사회적 가치의 구현과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
 -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의 사회적기업 및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협동조합
 - 마.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이 지정한 마을기업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직접 생산·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한다.
3. “희망기업(사회적약자기업)”이란 기업규모 및 가격 경쟁력 등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

* 사회적기업은 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해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 관련 계약제도 활용 가능하며,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인 사회적기업은 1인 견적 수의계약금액 5천만 원까지 가능(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18.7.24)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19.3.5))

인천시 계약부서 공공조달 가이드라인 제정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사례 : 서울시 공공조달 조례 제정 및 가이드라인

■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제정(2014년 5.14)

- 공공조달 가이드라인 이행(제6조)
- 사회적경제기업 등 공공조달 우대(제7조)
- 기업의 사회적 책임 평가(제8조)
- 근로자의 권리보호(제9조)
- 계약정보 공개(제10조)
- 사회적경제기업의 낙찰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자공개수의계약 금액 범위 내 7개 주요생산물목에 대하여 사회적경제기업(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

구 분	7개 품목	금액기준(추정가격) (전자공개수의계약 금액범위)	비 고
공사	① 실내건축	2천만원~4억원 이하	전문공사 기준
용역	② 청소	2천만원~5천만원 이하	청소용역은 직접 고용으로 전환되어 자치구만 해당
	③ 행사·공연		
	④ 간병		
⑤ 경인쇄			
물품	⑥ 화장지	-	
	⑦ 식품		

▶ 사회적 경제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언

4. 사회적 가치 확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되는 사회적 가치 구성요소 중 사회적경제 영역

□ 공기업의 지표 및 가중치 기준

범주	평가지표	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55)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6	
	- 전략기획		2	
	- 경영개선		2	
	-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2	14	8
	- 일자리 창출	7	4	3
	-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4	3	1
	- 안전 및 환경	3	2	1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	2	3
	- 윤리경영	3	3	
	3. 업무효율	5		5
	4. 조직·인사·재무관리	9	6	3
	- 조직·인사 일반	3	3	
	- 재무·예산 운영·성과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5	2	3 (1)
- 삼의질 제고	1	1		
5. 보수 및 복리후생비	8	5	3	
- 보수 및 복리후생	3	3		
- 총인건비관리	3		3	
- 노사관계	2	2		
6. 혁신과 소통	5	3	2	
- 혁신노력 및 성과	3	3		
- 국민소통	2		2	
소 계	55	34	21	
주요사업 (45)	주요사업 계획·활동·성과를 종합평가	45	18	27
	소 계	45	18	27
	합 계	100	52	48

▶ 사회적 경제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언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 사례

▶ 공공기관 고유 업무 연계 (1)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임대주택의 입주청소서비스에 **입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과 연계 유도

사업
추진
체계
면
어
일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LH-사회적기업 임대주택 입주청소 서비스 홍보
- LH 지역본부에 해당 사업 참여 독려 및 가이드라인 배포
- 청소 업무 사회적기업 정보 제공, 입주청소 서비스 가이드라인 골리
- 입찰차조직 등 현장 의견 수렴 및 참여주체 간 소통
-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 입주청소 서비스 가이드라인 관리, 지역 협의회에 가이드라인 배포
- 지역별 입주청소 서비스 사업 추진현황 점검
- 가이드라인에 따라 입주청소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업 선정
- 지역 사회기업협의회 → 입찰무렵-사회적기업 간 입찰정보 서비스 계약 지원
- LH 임대주택과 입주청소 서비스 계약
- 정소업종 사회적경제기업 → LH 임대주택과 입주청소 서비스 계약
- 입주청소 서비스 가이드라인 준수 및 서비스 관리

- LH-사회적기업 임대주택 입주청소 시범사업 최초 시행

▶ 공공기관 보유 자산 활용 (1) : 한국도로공사

- 청년, 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휴게소 매장 활용 기회를 제공해 판로확대, 취약계층 고용창출 등 적극 지원
- 일반매장 대비 저렴한 임대료, 자체 브랜드(B) 제작, 홍보 지원 등



< 사회적기업 1호 매장 영주제 >



< 한국도로공사 사회적기업 간판 >

자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공공기관 고유 업무 연계 (3) : KOTRA

- 사회적경제기업 역량에 맞는 해외진출 지원사업 제공

구분	주진 내용	주요 성과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신규수출기업화 참가기업 멘토링 등(31개사) -전문위원 맞춤형 밀착 멘토링, e커달로그 제작 지원(11개사)	
이동코트라 및 컨설팅	GCL 역량진단(31개사), 빅넷 이용 유망 시장 분석 이동코트라 방문 및 1:1 컨설팅(20개사)→해외마케팅 참가 지원	지원기업 51개사 ↓ 24개사 76.6만 달러 수출
맞춤형 해외 마케팅	1.홍성단지(1호)잇붙음종합타운 등 Z세(7개사) 무역사절단(6개사), 국내외 전시회 참가(6개사) 진사화사업(디,佛 등 2개사), 경제외교사절단(중, 1개사)	

* GCL(Global Competence Level) 역량진단 : 기업의 수출 및 해외마케팅 부분별 세부 역량 측정,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활용



인천항만공사, 수도권래미지공사, 한국환경공단
합동 구매 상담회
2019.6.26

사회적 경제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언

-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제품의 기술력 과 품질을 높여야 함
- 국가계약법상 공공조달의 경우 낙찰기준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의무구매 제도를 도입할 필요
- 2016년 발의하여 아직까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함

[기조발제 II]

**서울시 사회적경제 공공기관, 공공일자리
사례와 확대전략**

[이은애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서울시 사회적경제 공공기관,공공일자리 사례와 확대 전략 1)

이은애(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1. 불평등국가 대한민국, 경제민주주의 확장 위한 사회적경제에 주목하다

2008년 이후 세계경제는 장기적 경기침체와 양극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국은행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3%가 최대치가 될 것이며, 세계 4대 불평등국가라는 오명을 진 채 저성장기의 고착과 양극화 심화라는 이중적 과제를 풀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시대의 도래까지 전망되어 향후 경제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이에 문재인정부에서는 과거의 수출주도성장과 부채주도성장의 한계를 제기하며, 새로운 발전패러다임으로 소득주도성장론을 통한 시민들의 생활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벤처 중심의 혁신경제 성장 등을 조화시키는 네바퀴경제론을 펼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경제적, 사회적 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이윤극대화를 최고의 가치로 두는 시장경제와 달리,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고 시민들의 필요에 기반하여 시민들의 연대적인 공동생산과 소비, 재투자의 순환구조를 만드는 호혜성의 경제를 말한다. 이 과정에서 커뮤니티가 요구하는 재화의 혁신적 공급은 물론 노동시장 배제계층의 일자리 질 제고와 커뮤니티 내에 재분배성을 높여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 경제민주화를 확장시키리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서울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과 지역별 사회적경제연대체들이 중심이 되어 과거 중앙정부들이 가졌던 ‘한시적 창업비용 지원을 통한 개별기업 자립촉진과 고용복지 성과달성’의 정책패러다임을 ‘사회 제주체 간의 호혜성에 기초한 연대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으로 변화시키는 정책혁신을 이루고, 문재인정부의 정책기조로 자리잡게 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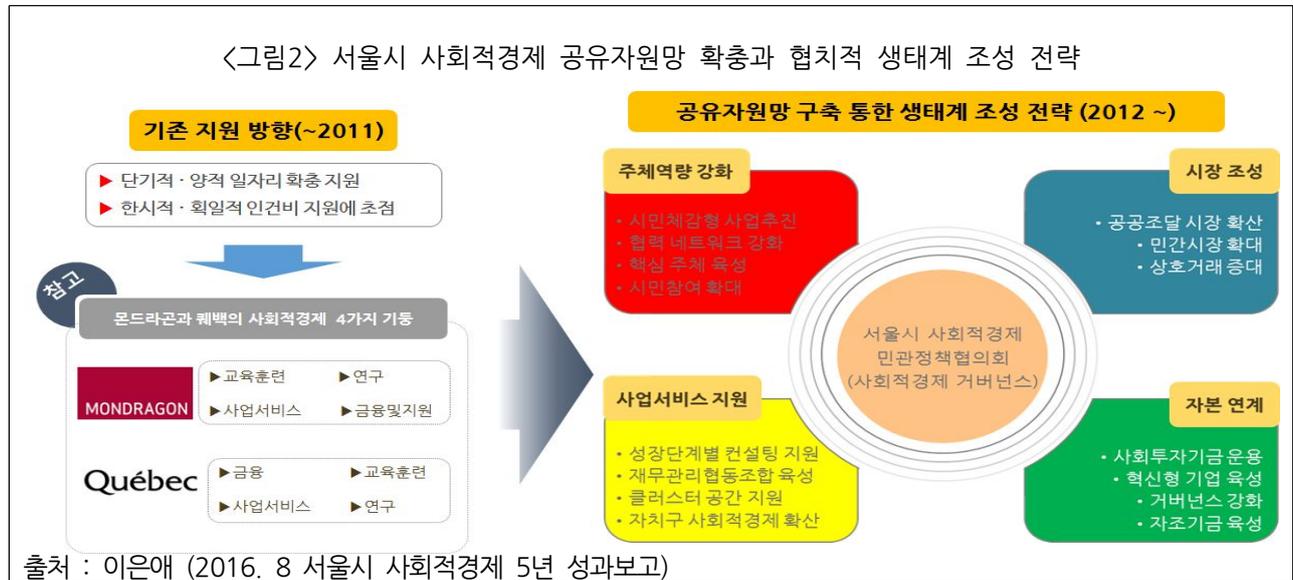


이에 본고에서는 지난 6년간 추진된 서울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전략의 타당성 및 정책수단의 변화도(input)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과 연대기반 강화정도(output), 사회적경제를 통한 시민들의 생활문제 해결과 경제민주화 기여도(outcome)에 대한 개략적인 평가와 전망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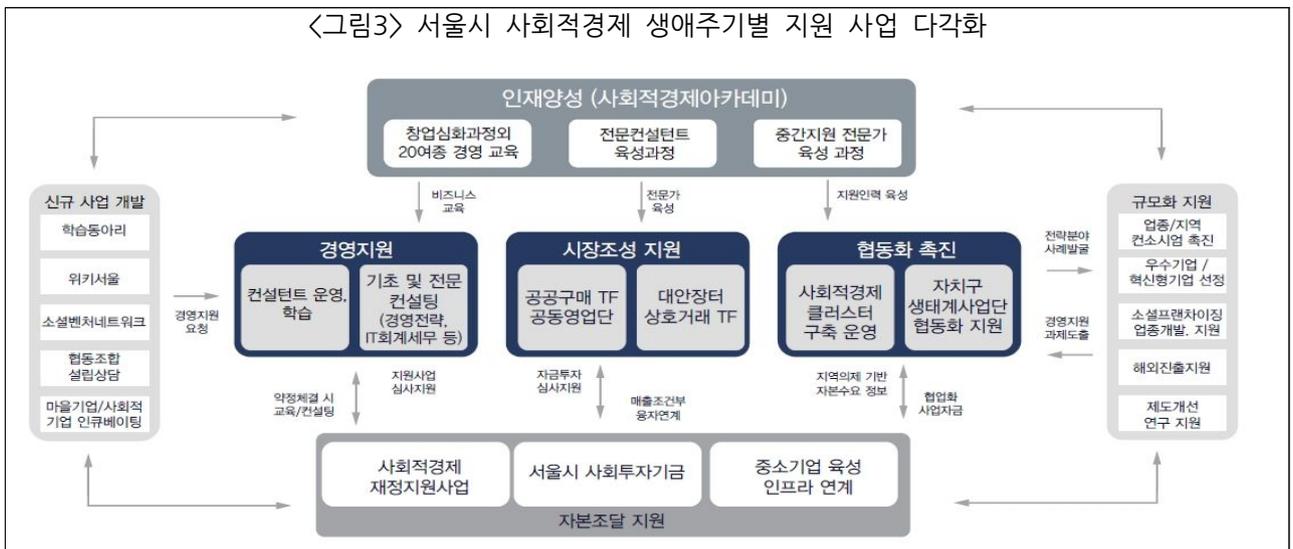
1) 본 원고는 2018 복지동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발간)에 게재했던 본인의 원고를 기초로 민선7기 서울시 사회적경제2.0 정책방향을 포함하여 보완 작성된 원고입니다

2. 사회적경제 공유자원망 구축 및 호혜적 거버넌스를 통한 생태계 조성 전략을 도입하다

지난 2011년 이후 충남과 서울을 시작으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에서는 민관 합의과정을 통해 ‘시민의 주도적 참여와 사회·경제·문화적 수요에 기반하여 운영되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통하여 사회문제의 혁신적 해결과 커뮤니티별 순환경제가 정착되도록(목적) 다양한 사회주체 간의 연대와 공동책임하에(원칙)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과제)’하는 방향으로 정책패러다임의 전환을 주도하기 시작한다. 또한 선진도시와 비교할 때 국내 사회적경제 조직간 연대경험이 취약한 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시 사회적 자본 확충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4대 공유자원망(협동사업망, 인재, 사회적 금융자본, 판로)을 구축하고 민만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정책을 공동생산’함으로써 시민사회의 역량강화와 보충성의 원리가 실현되도록 추진전략을 구현해 오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책기조에 걸맞는 정책수단의 개발 및 효과 검증이 중요한데, 서울시에서는 과거 97%에 달했던 인건비 중심의 직접지원 비중을 40%대까지 축소시키는 대신 생애주기별 사회적경제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간접지원의 정책수단들- 협동클러스터 조성 및 공유자산화, 지역의제 혁신사업 지원, 협동화 사업지원, 사회적경제특구, 인재양성 로드맵 수립과 교과과정 개발보급, 사회투자기금 조성, 사회책임구매 확대 등을 개발 보급하므로써 기업의 만족도와 연대기반을 높여 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의 혁신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창출에 따르는 리스크를 분담하는 인내 자본이자 다양한 고관여 경영지원’이 가능한 사회적 금융의 활성화가 생태계 조성시 필수요소이다. 지난 10여년간 국내에서 사회적금융 성격으로 운용된 자본규모는 약 1,300억원 정도이다. 이중 민간 출연자본은 200억원 규모로 미약하나 윤리적 자산투자자들의 출현, 사회가치기금의 출현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외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을 500억원 출연하여 용자 867억원, 임팩트 투자 145억원을 운용하였다. 또한 민선7기 들어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의 용도와 출연기금 확대가 합의되어, 사업자금계정/사회주택계정/자산화계정으로 1천억원의 추가 출연이 진행중이다.

국내 사회적금융의 재원조성시 지자체기금, 고용부 모태펀드, 미소금융, 신용보증기금, 중기벤처부 임트트금융 지원 등 공공재원의 비중이 절대적인 상황이다. 한편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재원조성으로 운영되는 공제기금도 40억원 이상 규모로 성장중이나 결손시 공동분담까지는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국내 사회적금융의 재원 다각화 및 상호부조성 제고의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시장조성 측면에서는 2014년 도입된 『서울시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조달시장의 규칙이 가격중심에서 가치중심으로 변화중이며, 그 결과 서울시의 2018년 사회적경제 구매용역액이 1400억원 규모로 조달참여 기업들의 매출신장율이 132%로 성장하는데 기여하였다. 이외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9000억원중 돌봄, 교육, 문화관광, 행사기획 등에서 사회적경제와의 계약도 활발하다. 반면 아직은 중증장애 여성 사회적기업에 대한 구매 편중도도 높아, 공공조달의 신규 기업 참여와 사회서비스 위탁시장 확대가 계속 과제로 제기된다. 또한 이러한 경험을 타지자체로 확산하거나 국회에서 우선구매촉진법 제정 논의를 이끌어 내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듯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정책수단의 변화(input)는 일단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된다. 이에 새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과제로 첫째, 지자체 수준에서 검증된 정책 내용과 민관거버넌스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17개 시도협의체와 같은 확산구조를 마련하며 둘째, 관련 법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셋째, 새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와 연계한 분야별 사회적경제 성장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2011년말 이후 서울시에서 추진해온 생태계 조성전략에 따른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과 연대기반 강화 정도 (output)에 대한 개략적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6년말 현재 전국의 사회적경제 기업은 14,948개소, 고용인원은 91,100명이다. 6년 전과 비교시 7배의 양적 성장을 보였으나, 신생 협동조합의 높은 휴면율(60%이상)을 반영해 정책 대상 수립이 필요하다.

표1) 사회적경제 기업 현황 (2016년)

조직유형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합계
조직 수(개)	1,149	1,713	1,446	10,640	14,948
고용규모(명)	7,629	37,509	16,101	29,861	91,100
특징	5대표준화사업 (청소,집수리,간 병,재활용등) 46.9%	일자리제공형 69.7%	지역농산물 가공유통 58.4%	사업자조합 75%	휴폐업 제외 실질 운영체 8천개소 추정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성과는 아래와 같이 양적, 질적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회적경제의 양적팽창은 2013년말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이후 소규모 신생 협동조합들이 주도했다. 그러나 창업준비가 부족한 신생 협동조합과 마을기업들의 휴폐업율이 높고, 80%를 차지하는 사업자협동조합들이 (택시쿵 사례처럼) 소상공인 및 플랫폼노동자들의 문제해결에 어느정도 기여할 수 있을지 전망하기 어려우나 향후 매우 중요한 정책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10년 이전 설립된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경우, 국내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들의 참여와 사회문제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인큐베이팅되어 비교적 높은 사회적 관계망과 R&D역량을 보유할 수 있었다. 이에 이들이 분야별 리딩기업의 위치를 점하며 현장협의체들을 이끌고 있다. 반면 중산층 붕괴와 사회서비스 소비 자지원제도의 발전이 더디고 사회적경제의 정치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초기 기업들의 규모있는 임팩트 창출과 성장, 혁신은 지체되고 있다.

사회적경제 선진국에서는 경험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최소 30년 이상 누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은 여전히 생태계 조성의 초기 국가이다. 이렇듯 기반조성이 취약한 한국에서 시민들이 비즈니스 역량이나 사회적 수요검증, 그리고 커뮤니티내 출자소비망을 확보하지 못한 채로 무작정 사회적경제 창업에 나서도록 설립지원 중심의 정책을 지속하는게 옳은지 재검토가 필요한 때다. 사회적경제의 개별사례를 보여주며 필요와 유용성을 설득해야 했던 시기는 지났다.

다행인 것은 평균 5년의 재정지원을 받으며 성장기를 준비할 수 있었던 자활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지속율이 90%대를 보이고, 인건비 지원중단 이후 지원대상자의 고용지속율도 60%대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고용의 질 연구 결과, 임금은 도시근로자 평균 급여의 70% 수준을 보이고 있다.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이전 소득이나 동종업종 영리기업 급여와 대비해 20% 정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사회보험 가입율도 94% 수준으로 일반기업 평균을 30% 상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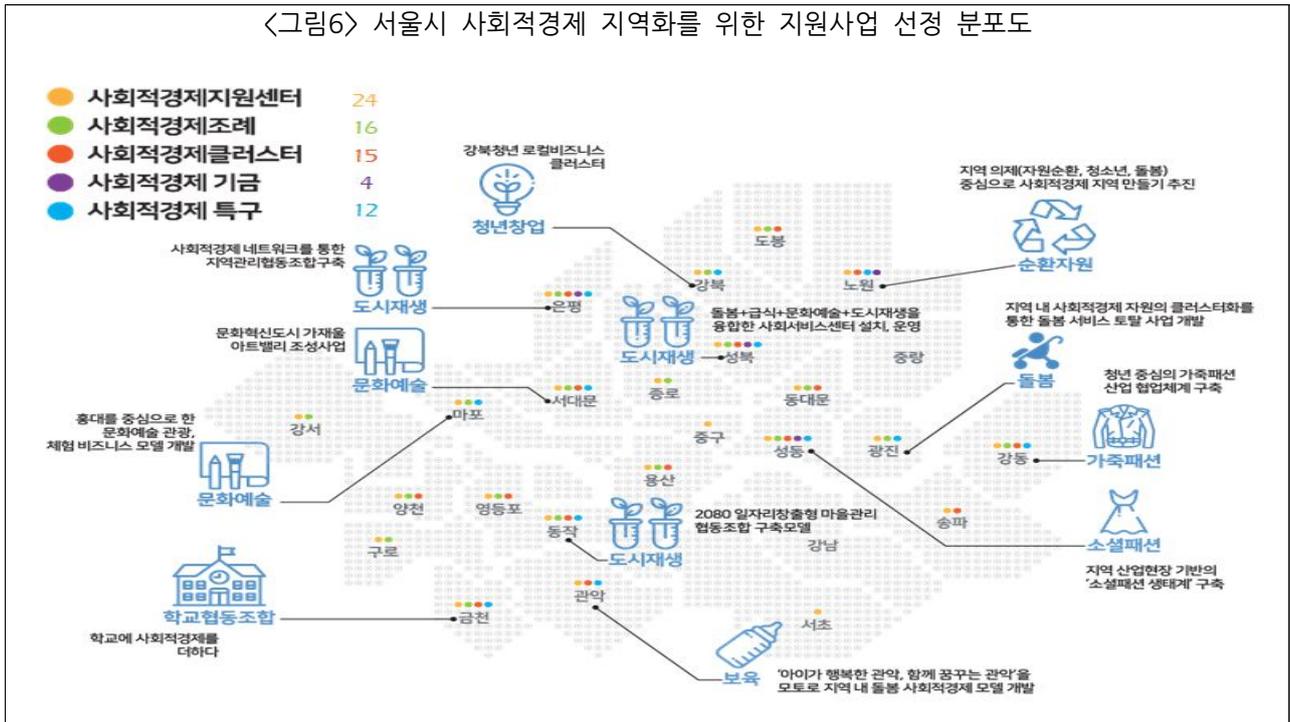
서울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전략으로 '연대를 통한 공유자원망 구축'과 '사회적경제 지역화'를 제시하며, 2012년 이후 민민/민관 거버넌스 활동과 사회적경제센터를 통한 협동화사업, 자치구 대상의 다양한 지원사업-협동화클러스터 구축, 자치구 생태계 조성사업, 자치구 센터 지원, 사회적경제특구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다양한 협업클러스터를 확대하는 가운데 조직유형별로 분절되었던 사회적경제 조직들 간에 교류와 협업이 촉진되고 있다.

〈그림5〉 서울시 사회적경제 협업 촉진 위한 공유공간 조성



또한 25개구에 사회적경제의 지역 기반이 조성되고 있다.

〈그림6〉 서울시 사회적경제 지역화를 위한 지원사업 선정 분포도



이러한 협업화와 지역화 사례로 서울 광진구 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주도한 돌봄특구 사업과 공유사옥 매입을 들 수 있다. 광진구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생태계조성 지원 3년, 자치구 지원센터 지원 6년, 사회적경제 돌봄특구 지원 3년을 거치면서 '지역돌봄 이업종 패키징'과 36억원 규모의 '공유사옥 매입' 성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광진주민연대라는 풀뿌리 시민연대체의 역사와 6억원의 씨앗자금이 큰 역할을 한 것이긴 하나, 사회적경제가 젠트리피케이션에 공동대응하며 지역자산 형성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특히 25개 자치구별 우선순위 생활의제를 선정해 지역내 사회적경제 앵커기업을 육성하며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과 지역사회의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회적경제특구 지정사업’의 효과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사회적경제가 근린생활지역이나 산업지역에서 의제중심의 사업연대 경험이 적어 소수 지역 외에 사업성과가 더디게 나타났고, 자치구 행정과의 협력도 부침을 보이는 가운데 후속지원이 중단되었다.

〈그림 7〉 서울시 사회적경제 특구 현황 (12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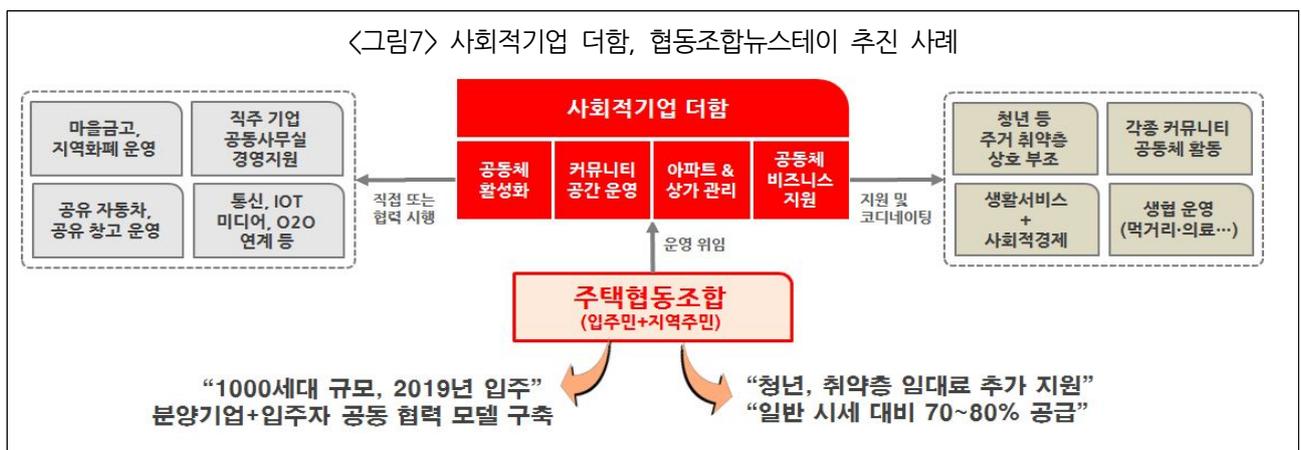
이러한 서울시 사회적경제의 생태계 조성전략의 변화는 2012년 7월 시작되어 현재까지 운영중인 ‘서울시 사회적경제 민관정책협의회(구 정책기획단)’라는 수평적 민관거버넌스를 통해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과 연간 사업 및 예산에 대한 공동합의제를 실천해 온 협치의 산물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한편 서울시 사회적경제 부문별 협의체들과 이들의 ‘네트워크의 네트워크’인 서울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기업회원 조직화율이 5%(2013년)에서 25%(2016년)로 더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사회적경제 상호부조기금 조성이나 상호거래의 규모있는 실천 등을 이끄는 자조적 연대망 구축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조직유형별 협의체들의 주기능이 제도별 정부 교섭에 있으나 실제 당사자연합회를 통한 제도개선 경험은 초기단계에 불과하고, 현장기업들의 성장에 필요한 사업적 연대로서는 기능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 공공의 지원이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무임승차 문화를 가속화시킬 위험이 존재한다. 이에 향후 민간 협의체 및 정부 지원정책의 방향은 사회적경제 조직들 간의 사업연합을 중심으로 ‘비분할 공유자산화 확대’가 추진되는데 집중투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태계 조성은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 보다는,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가 시민들의 생활문제 해결과 경제민주화 확장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outcome)가 최종성과로서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 경영공시 사회적기업 등을 제외하면, 국내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 총량을 수집분석하는 기관이나 객관적 자료는 부재한 상태이다. 사회적경제 등록제 전환 등 환경변화까지 고려하여, 서울시 차원에서 ‘지역형 사회적가치 평가활용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몇몇 의미있는 사례를 통해 사회적경제가 시민들의 집단적이고 긴급한 생활수요에 보다

혁신적이고 규모있는 사회적 영향력을 늘리고 있는지, 과거 개별기업 육성기에 비해 통합적이고 민주적인 문제해결거버넌스가 가동되기 시작하였는지 정도를 진단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2017년 서울시에서는 공보육 확충과 임대주택 등 사회서비스 공급확대시 전체 공급물량의 5~10%이상을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을 협의, 발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울의 사회주택 분야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사회주택협회를 만들어 공공의 정책목표 수립과 제도개선을 이끌었을 뿐 아니라, 그간 359호의 사회주택 공급 경험을 토대로 민선 7기에 1만 2천호의 서울시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것으로 역할을 합의하고 사업을 확대중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적기업 더함은 1천호 규모의 협동조합 뉴스테이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는 성과도 보여주고 있다. 더함의 사례를 통해 입주조합원의 지불능력별 차등임대로 도입과 소셜믹스가 실현되고 상가 및 커뮤니티 시설을 입주민과 지역사회에 필요에 기초하여 운영해 나가는 모델이 완성되기를 기대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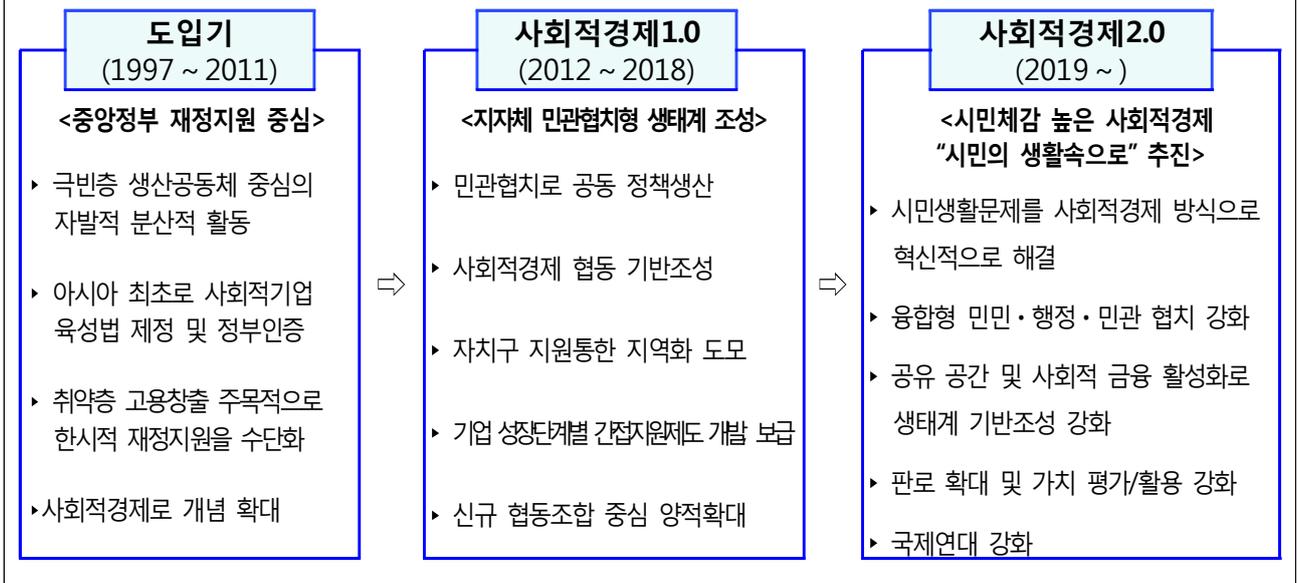
이렇듯 사회적 수요가 높은 분야에서 사회적경제 조직 간에 ‘사업적’ 연대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공공의 재정지원 방식을 변화시키면, 협업을 통한 자원공유와 공동생산이 증가할 뿐 아니라 비용절감을 통해 보다 저렴하고 질 높은 서비스 공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적경제가 집중해야 할 재화가 어떤 성격이어야 하는지도 명확해졌다. 즉, 현재와 같은 저성장기·중산층 축소기에는 시민들 간의 상호부조적인 생산소비를 통해 생활비용을 절감하며 일상의 반복구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생활재(주거, 먹거리, 교통, 의료복지, 교육 등)의 생산에 집중해야 한다. 이것이 사회적경제의 지속화는 물론 커뮤니티 순환경제로서의 역할수행을 가능하게 할 생산관리 상의 혁신과제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정책들은 대부분 이러한 사회적 수요나 시장규모 예측이 부재한 채, 재화 공급자인 개별 창업팀들의 욕구를 중심으로 선정, 지원되었고 그 결과 지역내 소상공인과 차별화하기 어려운 생존형 기업의 증가를 가속화시켰다. 이에 향후 설립이 전망되는 사회적경제진흥원 등에서는 의제별 커뮤니티의 수요와 공급력을 조사하고 규모화 할 전략분야를 제시하는 계획경제적 공급량 조정기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민선7기 서울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전략 2.0

지난 3월 14일 서울시와 서울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합의, 발표한 2.0 정책방향은 ‘사회적경제가 시민들의 일상에서 체감되는 서울’을 목표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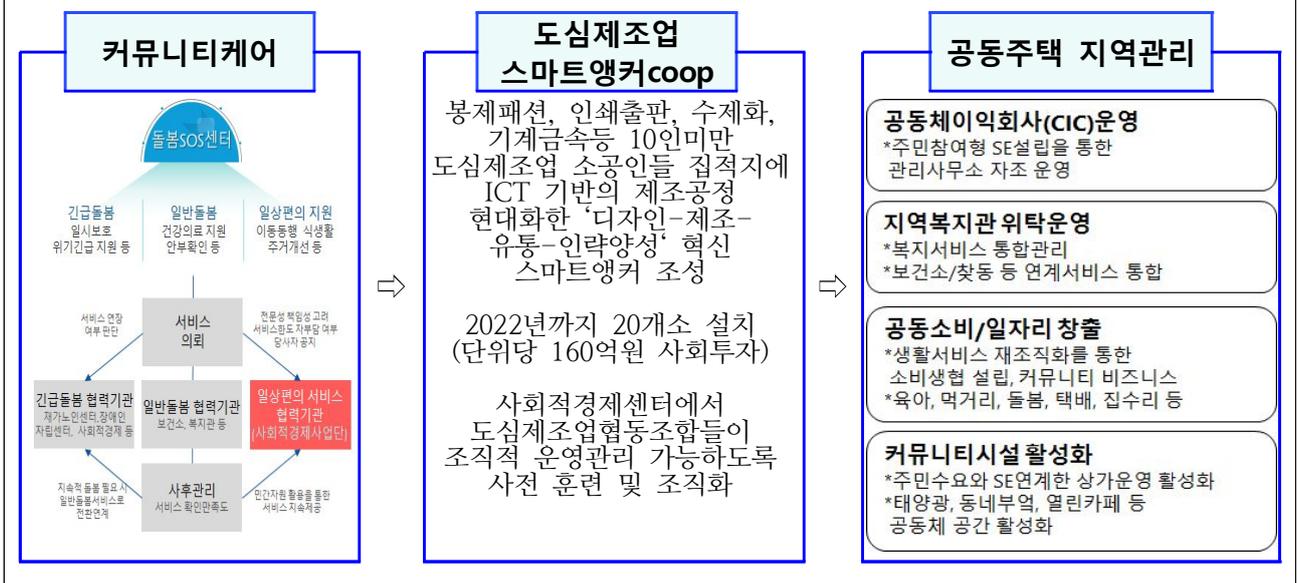
<그림8> 서울시 사회적경제 단계별 추진 전략



□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전략업종 사회적경제 사업연합 규모화 지원

지난 10여 년간 서울에서 매년 500~800개씩 신설되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에 대한 재정 및 경영 지원을 추진해왔고, 특히 지난 7년간 지원정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국내외로 확산시켰다고 자평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미션분야에 대한 이해가 낮고 문제해결력이나 경영역량이 부족한 사회적경제 영세기업들이 아무리 양적 확충을 거듭하여도 서울시민들의 주거·먹거리·돌봄·지역재생·취약층 노동통합 등에서 규모 있고 혁신적인 해법 제시는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에 현장기업의 자발적 창업과 사후 경영지원은 지속하되, 서울 사회적경제센터 및 업종연합이 중심이 되어 전략업종의 규모화 기획과 시범사업화를 추진하는 병행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그림9> 민선7기 서울시 사회적경제 시민체감형 지역순환경제 구축 분야



이외 서울시사회적경제센터에서 2019년 기획, 공모중인 전략사업들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사업명	추진사업(예시)	기대효과
전략사업 확산 지원	전략모델 사업화 및 업종연합 공모 지원사업	<p>1. 커뮤니티케어 5개 시범 자치구 사회적경제 시범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자치구 내 복지/보건/사회적경제 협력 시스템 구축 - 돌봄자원(가사, 위생·청소, 집수리, 노인·장애인·아동 돌봄 등) 연계 - 돌봄서비스 포괄바우처 개발 지원(서울시 복지재단 등과 협력) <p>2. 규모화 지원 공모사업</p> <p>예1) 지역관리기업 모델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및 임대아파트 자치관리 추진 - 자치구 시설공단과 지역관리사업 영역확보, 제도환경 조성 - *주차장관리, 공원/녹지 관리, 급식 및 시설 운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 등 - 지역관리기업의 안정적 수익구조를 위해 투입 가능한 일자리 통합운영 <p>예2) 상호부조형 사회적금융 활성화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소재 사회적경제 조직간 수익공유로 공제기금 조성 및 공제상품 개발 운영으로 상호부조형 사회적금융 사업화 - 사회적경제 공제조합 설립 운영 위한 관련 법·조례 정비 <p>예3) 도심제조업 협업 모델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션봉제, 수제화 등 서울형 도심제조업의 협동조합 사업화 - 서울시 스마트앵커사업의 실현가능성 제고 위한 주체 조직화 - 취약층 적합 신규 제조유통 사회적경제 협업 지원 등 <p>예4) 사회적경제 유치원 전환 / 신규 설립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보육, 마을학교 사업조직 등과의 연대로 지역 에서 폐업하는 사립유치원 문제해결 및 시민참여형 유치원 설립을 위한 대규모 자산화 사업을 추진할 주체와 시범사업 추진 과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별 사업 연합 성장 통한 임팩트 규모화 - 주민 비즈니스 자생력 확보 - 사회적경제기업의 공유자산 확대 - 사회적경제 종사자를 위한 보충적 사회안전망 제공 - 사회적경제 업종 전략을 구체화하여 도심제조업 재생에 기여, 좋은 노동 /일자리 창출
신규 전략사업 모델 개발	2019 신규 전략사업 기획 지원	<p>예1) 태양의도시 재생에너지 범주 확대 및 통합관리사업단 육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청소업종의 직접고용 전환으로 신규 사업모델 개발 필요 -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등과 컨소시엄을 통해 학교 및 아파트 베란다, 서울시 시민투자형 태양광 발전시설 등의 패널 청소 및 보수 수리 추진 <p>예2) 1차 개업의 조직화 통한 새로운 의료생협 모델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참여로 건강예방 효과 제고할 의료생협의 혁신모델 개발로 규모화 모색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 공모 및 직접 기획 사업 등 다각적 방식 모색

□ 사회적경제 및 플랫폼노동 조직과 종사자들의 상호부조를 통한 공유자산 형성 촉진 지원

〈 (가칭) 서울시민공제 개요 〉

- 대 상 : 사회적경제 기업, 소셜벤처, 플랫폼경제 노동자, 중간지원조직 등 포괄적 시민경제 조직/개인
- 주요상품 (예시)
 - ▶ 사회적경제 조직: 보증보험, 운전자금 등(※ 서울시 민간위탁 9천억원 연간 보증보험료 15억원)
 - ▶ 시민경제 종사자: 기업가 상해실업시 재기보험, 종사자 보충실업급여, 생활자금 융자 등
- ※ 수요조사 결과(2018)
 - 사회적경제 조직 189개 응답(71% 필요 동의, 긴급 운영자금 대출과 대표/종사자 퇴직연금 운영 수요 높음)
 - 사회적경제 종사자 417명 응답(가입의사 62%, 실업급여와 의료비공제 수요 높음)

〈 사회적경제 업종클러스터 조성 지원 〉

- 목 적 : 민간소유의 공동 사업단지 조성시 자금 용자를 통한 자산형성 지원
- 재 원 : 서울사회투자기금의 장기저리(최대 10년, 2%) 용자/ 주택도시보증공사 재생지 용자 등

□ 사회적경제 거버넌스 활성화

지난 2012년 서울시에서 모델화 한 ‘민관 공동 정책생산과 예산 합의 거버넌스’인 민관정책협의회에 부
문, 지역, 업종의 기업협의회 대표나 정책 전문가 뿐 아니라 소비자 대표, 사회적경제 노동자 대표, 청년
대표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개편하고 다양한 부서간 행정협치 구조를 활성화 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 소셜벤처허브 확대구축은 물론 서울시내 거점 산업분야별 클러스터와 연계한 사회적경제 복합
공간도 확충할 계획이다

별첨 1) 서울시 특화 지원사업 개요

사회적경제 혁신형 사업 지원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16조 (혁신형 사업비 지원)

사업개요

- 참여대상 : (예비)사회적기업(준비기업, 컨소시엄), 협동조합 연합회 및 컨소시엄, 사회적협동조합
- 사업내용 : 서울이 안고 있는 사회적 약자(노인, 장애인 등), 지역재생, 환경 등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 모델을 제시하는 사회적경제기업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구분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적기업 규모화 분야	협동조합 협업활성화 및 규모화 분야
참여대상	· (예비)사회적기업(준비기업, 컨소시엄) ·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컨소시엄	· 협동조합 연합회 및 협동조합 컨소시엄, · 사회적협동조합
추진방법	공모·심사를 통한 사업비 지원	
공모분야	사회서비스, 제조업기반 및 사회적경제-금융활성화 혁신형 사업, 협동조합간 협력 활성화 사업(전략모델 발굴, 공동마케팅, 공동시설구축 등)	
사업기간	약정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중간평가 후 추가사업비 지원)	약정체결일로부터 '16.12월까지 (단년도사업)
지원규모	최대 1억이내(컨소시엄 최대 2억) ▶초기사업비 5천만원, 추가사업비 5천만원이내	최대 1억이내(연합회, 컨소시엄) ▶ 사회적협동조합 : 최대 5천만원이내

서울시 기초 지자체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지원사업

서울시 사회적경제 자치구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특구 육성

(19.2월현재)

구분		내용	사업비(백만원)	
			예산	집행액
통합 지원 체계 구축	생태계 사업단	개념	자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민간중심 사업단 운영	
		지원대상	950 (시비)	750 (100%)
		지원기간		
	지원내용	1년차(1억원), 2년차(1.5억원), 3년차(2억원)		
	통합 지원 센터	개념	민관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 중간지원조직 구축운영	
		지원대상	2,170 (시비)	2,133 (98.3%)
지원기간		최대 6년(1년 단위 평가 후 연장)		
지원내용	1년차(1.5억원), 2년차(1.4억원), 3년차(1.4억원), 4년차(1억원) 5년차(0.9억원), 6년차(0.8억원)			
특구 육성	개념	지역재생, 돌봄, 패션 등 특정 지역문제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해결하는 성공지역 육성		
	지원대상	1,100 (시비)	260 (23.6%)	
	지원기간			3년 6개월(준비사업 6개월, 본사업 3년)
	지원내용			자치구별 총 5억5천만원 이내 - 준비사업 5천만원, 본사업 5억원(1년 1억, 2년 2억, 3년 2억)

- 2018 서울시 사회적경제특구 추진내용 : 지역의 인구 및 산업적 특성과 결합된 사회적경제 사업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확산 가능한 사회적경제 성공 사례를 만드는 지역기업컨소시엄 지원

본 사 업	1	성동구	산업현장 기반 소셜패션 생태계 구축
	2	광진구	노인돌봄 서비스 클러스터 개발
	3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 융합형 도시재생 모델 구축
	4	노원구	의류재이용 통한 자원순환 마을만들기
	5	관악구	마을이 아이를 함께 키우는 서로돌봄사업
	6	마포구	홍대앞 문화예술 특화 사회적경제 비즈니스
소 계			
준 비 사 업	1	강동구	청년 중심의 가족패션 산업 협업체계 구축
	2	강북구	강북구 청년, 사회적경제와 만나다
	3	동작구	동작 청년 살림 지구 조성
	4	금천구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구축
	5	은평구	도시재생 지역관리 협동조합 구축
소 계			

서울시 자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지원

- 추진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1조(시설비 등 지원)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15조(시설비 등 지원)
 - 민선6기 공약사항 :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공간 조성 12개소('14 ~ '18.8월)
- 사업목적
 - 지역 사회적경제조직의 업무 및 협업 공간 지원을 통한 기업 역량 강화
 -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개방·공유 공간으로 기획하여 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 거점으로 조성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사회적경제조직 공간 지원을 위한 유희공간 확보 자치구
 - 지원내용 : 리모델링(신·증·개축) 공사비, 개소당 최대 8억원 지원
 - 추진방법 : 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자치구에 사업비 지원
 - 추진내용
 - 지역 사회적경제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사회적경제조직 업무·협업·인큐베이팅 공간, 지역주민 교육·회의·홍보·판매장 등으로 활용
 - 추진실적 : '13 ~ '18년 총15개 자치구 지원, 현재 13개소 운영 중
- 공정무역 판매공간

연번	명 칭	위 치	규 모	운영방식	공간구성	개소일
1	공정무역 카페 '지구마을'	신청사 지하1층	22.25㎡ (지하1층)	자체운영	매장 및 홍보/전시공간	2013.1.12

지하철역사 사회적경제 복합공간 ※ 전시/홍보 공간으로 판매 기능 없음

연번	명칭	위치	규모	운영방식	유/무상	계약기간
1	이수마당 (14.11월 개관)	7호선 이수역	48㎡ (지하1층)	공동운영 (시/자치구/ 협의체)	무상	'17.2.27.~ '20.2.26.
2	느티나무 (14.11월 개관)	5호선 답십리역	50㎡ (지하1층)		무상	'17.2.27.~ '20.2.26.
3	서초 나눔허브 (16.3월 개관)	3호선 교대역	37.7㎡ (지하1층)		유상	'18.11.20.~ '20.11.19.

※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3조(무상사용규정) 삭제에 따라 '17.9월이후 무상사용 불가

자치구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공간 현황

선정연 도	선정구	공간 소재지	규모	보조금액 (백만원)	자치구 추진현황
'13년	은평	은평구 은평로 245(녹번동)	1,100㎡ (지상3층)	시비:2,100 (서울시소방재난 본부 예산)	○ '14.3월 개관/운영 ○ 15개 기업, 중간지원조직, NPO 등 가타 유관기관 입주
	성북	성북구 종암로25길 29 (종암동)	2,096.8㎡ (지하1층/지상6층)	시비:1,000 ('13년 지원)	○ '14.11월 개관/운영 ○ 10개 기업, 중간지원조직 입주
	영등포	영등포구 선유동1로 80(당산동3가)	734㎡ (지상2~4층)	시비:1,000 ('13년 지원)	○ '15.4월 개관/운영 ○ 8개 기업, 1개 중간지원조직 입주
	관악	관악구 난곡로 78(난향 동)	355.96㎡ (지상4~5층)	시비:1,000 ('13년 지원)	○ '15.4월 개관/운영 ○ 8개 기업, 중간지원조직 입주
'14년	노원	노원구 동일로 174길 27(공릉동)	971㎡ (지상1~2층)	시비:800 ('14년 지원)	○ '16.4월 개관/운영 ○ 12개 기업, 중간지원조직 입주
	양천	양천구 목동동로 375(목 동)	1,038.03㎡ (지하1~지상3층)	시비:800 ('14년 지원)	○ '17.6월 개관/운영 ○ 4개 기업 입주
	동작	동작구 노량진로 140 메가복합빌딩2층 (노량진동)	651.88㎡ (지상2층)	시비:700 ('15년 지원)	○ '16.3월 개관/운영 ○ 14개 기업, 중간지원조직 입주
'15년	성동	성동구 폭섬로1길 2 외 1 (성수동1가)	899.55㎡ (지하1~8층)	시비:900 ('15년 지원)	○ '15. 6 : 공모사업 선정 ○ '17.7월 개관
	도봉	도봉구 노해로 279-5(창동)	880.29㎡ (지하1~3층)	시비:900 ('15년 4억, '16 년 5억 지원)	○ '17.6월 개관/운영 ○ 6개 기업 입주
'16년	서대문	서대문구 수색로 27(남가좌동)	1059.53㎡ (지상2~4층)	시비:700 ('16년 지원)	○ '17.3월 개관/운영 ○ 37개 기업 입주
	용산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한남동)	528㎡ (지하1층)	시비:400 ('16년 지원)	○ '17.7월 개관/운영 ○ 6개 기업 입주
'17년	동대문	동대문구 왕산로 128 (용두동)	268.43㎡ (지하2층)	시비:200 ('17년 지원)	○ '18.8월 개관/운영 ○ 5개 기업, 중간지원조직 입주
	금천	금천구 탑골로8길 23 (시흥동)	688.9㎡ (지상1~4층)	시비:800 ('17년 지원)	○ '18.5월 개관/운영 ○ 9개 기업, 중간지원조직 입주
	관악	관악구 관악로 140 (봉천동)	929.6㎡ (지상1~6층)	시비:600 ('17년 지원)	○ '17.4 : 공모사업 선정 ※ 자치구 신축취소 결정 (반납완료)
'18년	중랑구	중화동 297-4	731㎡ (지상2층)	시비:700 ('18년 지원)	○ 진행중(설계중)
	구로구	오리로1154 천왕역사 (오류동)	795㎡ (지하1층)	시비:100 ('18년 지원)	○ 진행중(서울시 계약심사 완료)

[토론 1]

김도균

사)인천지역자활센터협회 부회장

“인천자활사업 공공일자리 확대방안은 있다”

김도균 (사)인천지역자활센터협회 부회장)

이렇게 많은 사회적경제 영역의 관계자들이 오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겠고, 경제가 좋지 않다고 하시는데도 자활기업의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자활기업 대표님, 직원분들, 자활센터에서 참여주민분들과 함께 자활사업 발전을 위해 땀 흘리시며 일하고 계시는 실무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은애 센터장님의 발제를 읽고, 아! 역시 서울이다. 하는 생각이 먼저 든 것은 저 뿐만 아닌거 같습니다. 중요하게 본 점은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를 민관거버넌스를 통해 실행해서 사회적경제 영역의 매출이 132% 성장한 성과가 보였다고입니다. 인천도 올해 재정이 되어 많은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인천도 수치화를 시켜 얼마나 성장했는지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제 토론 제목이 “인천자활사업 공공일자리 확대방안은 있다“입니다.

두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첫번째는 조례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고

두번째는 실사례를 들면서 절망이 아닌 희망과 기대를 가졌으면 합니다.

우선 관련된 법과 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 지원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공유지 우선 임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시 공동체 생산품의 우선 구매
5. 기타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 또는 용역 구매 시 사회적기업 제품(재화 및 서비스) 우선 구매를 촉진 하여야하며, 해당년도 구매계획, 전년도 구매실적, 총 구매액에 대한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 비율 등을 2월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한다.

대상 공공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우선구매절차

직접구매 : 해당 기관이 직접구매하는 경우 자체구매(직접발주 또는 “나라장터” 활용 또는 조달 구매(조달청) 할지 결정

간접구매 : 공공기관 이용(또는 물품구매)을 계약한 업체가 사회적기업 물품(용역 포함)을 구매 토록 계약조건 등에 명시

인천광역시 조례를 보면

인천광역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지원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평가 등을 통해 공공조달에 있어 사회적 가치의 구현과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의 사회적기업 및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중략” 인천시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라. 협동조합 기본법 제 2조에서정한 협동조합

마.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이 지정한 마을기업

이 밖에도 부평구, 서구, 남동구는 지자체에서 정한 각각의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런 조례가 있음에도 활용되지 않으면 그냥 남들 다 가지고 있는 조례에 불과하겠지요.

공공재정 일자리사업이 자리 잡은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양곡배송(희망나르미)사업

2010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수급자.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 신청자로서 정부에서 양곡 90% 지원 하고 자부담 10%만으로 10kg 쌀을 배송하는 사업으로 배송과 더불어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취약계층 발굴 또는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찾아내고 돌보는 사업입니다. 이는 안정적인 일자리 개발과 사회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모범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현재 전국 230개 지자체에서 175개 자활근로, 자활기업이 참여하며 1,100명의 일자리를 만들었으며, 경로당 양곡배송으로 99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영향플러스 사업도 16개 자활근로 및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주거 현물급여 집수리사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주거현물급여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저소득층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기회를 제공 하는 서비스로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스
수선비용	378만원	702만원	1,026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자활기업 또는 자활근로사업으로 경보수를 중심으로 진행 하고 있는 공공재정 일자리 사업입니다.

전국자활기업이 만들어졌으며 현재는 도시재생 및 사회주택, 지역관리기업 사업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방문요양, 주간보호, 복지용구, 요양시설, 가사간병, 노인돌봄, 산모신생아, 장애활동 등 돌봄 영역에서 6734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처럼

지자체의 역할은 위에 있는 표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각 법 및 조례에 나와 있는 자활근로, 자활기업 지원 조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일부 국.공유지 우선 임대 등은 시행하고 있으나 지자체 사업의 우선 위탁,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등은 미미한 상태입니다.

이는 제도를 이행하려는 지자체 의지의 문제도 있겠지만 제도상의 문제로 접근해 차근차근 이루어 지도록 지자체와 지역자활센터가 서로 협력해 조례제정을 실행하려는 노력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자체는 자활기업이 자활센터의 성과평가의 대상으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사회안전망 구축의 최후를 담당하는 동반자와 사회적경제 기초를 다지는 센터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내 취약계층의 자활. 자립이라는 가치가 이루어질 때 지자체 예산 감소효과도 볼 수 있고 지역 내 취약계층의 고용문제를 해결하며 지역의 풀뿌리 경제를 활성화하는 다중효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지점이라 생각됩니다.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많은 것들이 타지역 업체 또는 대기업이 수주하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것을 자활근로, 자활기업에서 할 수 있는 공공의 일거리, 일자리를 개발하고 발굴해서 자체 해결 한다면, 자활기업의 매출향상과 구성원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 및 추가로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성과가 지역에 선순환 되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것입니다.

제안사항으로

■ 학교운동장 비산먼지 사업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억제 사업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천에서만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학교운동장 비산먼지역제” 사업이 14년부터 19년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고, 계약금액도 14년도 1억8백만원으로 시작해 19년 현재는 10억에 100개 학교 살포를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근거로는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응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입니다.

학교비산먼지역제 사업의 경우 자활근로 참여주민 또는 기업이 진행하였을 경우 30여명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데 수의계약근거 때문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영양플러스 사업

2011년도부터 시작한 공공영역의 사업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영양상태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식품 공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통해 건강증진에 기여 하는 평생 건강관리형 영양지원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일반 업체가 진행하고 있고 자활센터 또는 자활기업이 전국 16개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경우는 계약금액이 높아 전국으로 입찰을 풀어야 하는 계약법으로 일반경쟁으로 진행되어 사업을 진행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포기한 경우입니다. 이는 김용구 박사님의 발제문 중 서울사례에 표현 해주신 사회적경제기업의 낙찰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자공개수의계약금액 범위 내 7개 주요 생산품목에 대하여 사회적경제기업(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함.

아직은 품목제한은 있지만 된다면 인천에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규모화 및 활성화가 될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자체는 조례 개정을 통해 자활기업의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 파트너로서 자활사업, 자활기업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19년도에 “자활사업활성화”가 발표되면 매출금의 70:30 사용으로 자활근로 사업에 대한 규모화 및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또한 복지부의 계획에 따르면 자활사업에 매년 1만명의 참여주민 증가계획이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지자체 및 광역자활, 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도 각각의 위치에서 자활센터와 자활기업에 맞는 공공일자리를 고민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론 II]

이혜란

인천자활기업협회 부회장

인천자활기업이 처한 문제점과 지속적 발전을 위한 방안

이혜란 (인천자활기업협회 부회장)

자활기업으로 출범한지 14년이 된 크린인천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혜란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자활기업이 처한 문제점과 방안을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자활기업은 2017년 10월 발표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사회적경제기본법상의 사회적경제기업에 자활기업이 포함되면서 보다 적극적이며 힘차게 사회적경제에 당당한 당사자 조직으로서 여러 분야에서 사회적경제의 보다 나은 가치실현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활기업이 처한 문제

○ 자활기업 중 가장 많은 분야가 청소자활기업인데 2018년 9월 공공기관 근로자 직접 고용으로 인해 학교청소 근로자가 시교육청 소속의 직고용으로 전환되면서 청소자활기업들 대부분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학교청소에 큰 비중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온 많은 기업들이 또 다른 공공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 하에 직원들 반 이상 또는 90%가까이가 퇴사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로인하여 청소기업에서의 공공의 일자리의 규모는 확연하게 축소되어 경영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업 위기에 처한 기업도 생겼고, 다른 업종을 추가하거나 신규아이템을 개발하여 다시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 공공입찰시 입찰이 되어도 적격심사에서 요구 하는 사항들을 충족시키기 어려워 계약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드문 실정입니다. 적격심사에서 요구하는 사항들 중 계약 금액에 따라 1억~5억 이상의 실적을 요구하는 실적증명이 있는데 현실상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재무상태표등에 재무비율(자본.유동비율, 순이익회전비율)을 보는데 이러한 비율 또한 맞추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활기업이나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공공입찰시 사회적 가치 반영에 큰 비중을 두어 입찰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를 위하여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자활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을 최대 2.0까지 확대하고, 협동조합 형태의 기업에 가점을 2.5점 부여할 수 있도록 변경」 된 점은 반가운 소식인거 같습니다.

○ 자활기업의 업종별 유형 현황(2017)

(단위:개,%)

구분	청소 소독	집수리	돌봄 간병	음식 도시락	폐자원 재활용	서비스 세차	기타	계
개소	258	184	144	98	42	30	299	1,055
비중	24.5	17.4	13.6	9.3	4.0	2.8	28.3	100

자활기업의 업종을 보면 청소와 기타를 합쳐 50%가 넘으며 모든 업종이 서비스업에 치중하여 기업의 규모화를 이루기 어렵고 제조업 같은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기업을 만들 수 없는 것 또한 자활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데 큰 걸림돌이 된 것 같습니다.

□지속적 발전을 위한 방안

○ 보건복지부는 2018년 7월 25일에 청년 취.창업 지원 방안 등 5가지 대책이 포함된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자활기업으로 2만여 일자리를 만든다는 목표 하에 빈곤일자리 확대, 소득 재분배 및 계층 이동이 가능한 환경 조성을 내세워 발표한 자료에 새로이 출범하는 자활기업에 대한 방안들은 나와 있는데 현재 운영 중인 자활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합니다. 또한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해 자활기금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 한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인 반영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좀 더 적극적이며 실용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방안과 더불어 담당 공무원들의 인식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혁신성장 및 일자리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계약법시행령이 2018년 5월 18일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치단체 발주사업 참여 기회 확대의 주요내용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확대로 지금까지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이 2천만원 이하까지 가능했으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구매 담당자들은 여전히 꺼려하고 있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지도 및 이해도가 낮아서 구매로 이어지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인지도를 높이는 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우선구매가 아닌 의무구매가 될 때까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생산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공공기관의 장은 자활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할 경우에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는 조례가 있으나 앞서 말한바와 같이 실선 공무원들에 의식이 부족하거나 요구하는 품목을 자활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품목이 없는 경우 또한 많아서 구매로 연결되기가 어렵습니다. 공무원들에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교육에 앞서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들이 보다 다변화된 상품 및 용역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 상호거래활성화를 통하여 당사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대와 더불어 공공의 사업아이템 개발 및 동종업체간의 협업을 통한 공동생산의 증가 및 보다 저렴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공급하므로 사업의 규모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전국에 있는 청소자활기업은 전국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한국자활기업청소연합회를 창립하고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 개발과 관과의 협력을 구축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자활기업에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당사자 조직인 자활기업과 행정조직 그리고 지원조직간의 유기적인 소통과 끊임없는 고민으로 당면에 해 있는 작은 문제부터 풀어나간다면 몇 년 뒤에는 사회적경제 조직 안에서 자활기업이 자기역할을 다 할 수 있으리라 기대 해 봅니다.

[토론 III]

안미현

중앙자활센터 자립기반팀장

공공정책연계 자활사업 확대방안 모색

안미현 (중앙자활센터 자립기반팀장)

1. 들어가며

2019년 8월 시행예정인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19. 4. 장관보고)은 그동안의 자활사업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물론이고, 지역(광역)자활센터, 자활기업 및 참여자 등 자활진영 모두에게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인천광역자활센터와 인천지역자활센터협회가 공동 주체하는 이 논의는 자활사업의 제도개편을 앞두고 공공일자리를 중심으로 자활사업의 확대를 모색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김용구 박사님께서 발제문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소득불균형 상태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의 사회적경제정책의 정당성, 특히 지난 4월 발표한 생황SOC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일반기업과 자활기업의 지속가능성, 경쟁력을 재무분석 등 자료를 통하여 제시하였고 특히 취약계층 일자리 확보에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양과 질 모두에서 뒤지지 않는다고 발표하셨습니다. 끝으로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4가지 제언을 주셨는데 1. 자활기업 활성화 2.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3. 사회적경제 판로조직 인천형 "경북조합상사" 구축 4. 사회적가치 확산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하며 특히 인천형 사회적경제기업 종합상사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자활기업의 현실을 감안하면 타당성이 있고 성공가능성도 높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은애 센터장님은 서울시의 사회적경제정책 흐름과 실제 조례와 정책으로 구현되는 과정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지난 2011년 이래 서울시가 단기적·한시적 지원에서 머물던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에서 사회적경제 공유자원망구축을 통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정책(주체역량 강화, 시장조성, 자본연계, 사회서비스지원 및 민관협치) 도입으로 정책패러다임 전환을 하였으며, 생태계 조성의 필수 요건인 사회적금융 활성화,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서울시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양적·질적으로 성장한 것을 수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간접 지원의 정책수단들 - 협동클러스터 조성 및 공유자산화, 지역의제 혁신사업 지원, 협동화 사업지원, 사회적경제특구, 인재양성 로드맵 수립과 교과과정 개발보급, 사회투자기금 조성, 사회적책임구매 확대 등 - 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조직유형별로 분절되었던 사회적경제 조직들 간에 교류와 협업이 촉진되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사회적경제특구 지정을 통한 사회적경제 조직과 지역사회 협력 사례는 성공 여부를 떠나 자활진영의 오래된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지역화 관점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광진 사례) 또한 시민들 간의 상호부조적인 생산소비를 통해 생활비용을 절감하며 일상의 반복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생활재(주거, 먹거리, 교통, 의료복지, 교육 등)의 생산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깊이 공감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공공정책연계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먼저 공공정책 특히 일자리 국정과제 주요정책들을 돌아보고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정책당국과 자활진영의 공통과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2. 자활사업의 여건

정부는 자활사업의 확대를 국정과제의 하나로 표방하였으며 복지부도 자활급여 기본계획(17. 8),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18. 7),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8월 시행 예정) 등을 통해 빈곤층의 자립여건 악화 방지, 소득 1분위의 사업 및 근로소득감소로 인한 빈부격차 확대문제 해소 등 사회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고 한국자활복지개발원(19.7.16.설립)을 통한 자활사업의 민간전달체계를 개편하고 있으며 그동안 진행되던 사업관리 중심의 자활사업에 상당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국정과제 26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에 근거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은 자활기업 문호 개방 및 부처간 칸막이 제거, 자활기업 지원 인프라 개편(한국자활연수원 등)을 기본으로 성장단계별 지원방안 외에 예비자활기업 제도, 기업연계사업 확대 등 창업 보육환경 개선, 성장단계의 시장 적응력 제고를 위한 규모화 지원, 컨설팅 확대, 보증지원 및 정책자금 운용 활성화, 계약법 예규개정에 따른 입찰 시 가점 부여 및 수의계약 금액 확대 및 명문화, 사회적책임조달 평가 시 가점 등을 제시했습니다.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은 그동안 문제되었던 취약계층의 자활사업 참여 범위를 제한적으로나마 확대하고, 매출액 사용에 있어서도 상당히 유연하게 이루어지며, 인턴십을 통한 취업지원 활성화, 창업자금 활용, 자활기업 설립 및 운영 활성화, 자산형성지원사업, 센터인력 및 처우 개선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긍정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문제입니다. 근로빈곤층의 자활사업 참여 확대정책은 중위 소득 기준 50% 이상의 경우라도 필요 시 지자체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결정을 통해 자활사업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2020년 예산뿐 아니라 당장 2019년 하반기 추경을 통해 1만명의 자활참여자를 추가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는데, 빈곤층 일자리 사각지대 해소에 자활사업의 역할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즉시 집행하기 위해 하반기 지침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법 개정을 제외한 모든 내용이 8월 1일부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3. 자활사업과 일자리 국정과제의 연계

정부는 일자리 중심경제, 사람중심경제,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일자리 위원회를 중심으로 일자리 정책을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100대 국정과제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은 4가지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재정·세제 등 정책수단을 일자리효과로 이어지도록 한다. 둘째 상생형 생태계와 혁신성장기반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공공서비스 제공인력 확충한다. 셋째 노동시장 격차해소와 근로조건 개선, 넷째 청년·여성·신중년 등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중 자활기업과 직접 관련있는 분야는 6.사회적경제 활성화와 7.

지역일자리 창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회적경제의 주요 분야별 진출 확대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서비스 진 입장벽 해소 및 질제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소 외계층의 문화향유권 증진 및 지역관광 체육 사업 활성화, 상생협력기반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프 랜차이즈형 협동조합 육성, 지역기반 마을기업 확산 및 농어촌 특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과 주민참 여형 신재생에너지 보급, 소셜벤처 통한 청년 취·창업 붐 조성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17. 10)으로 구체화된 6개 분야(사회서비스, 주거환경, 문화예술, 프랜차이즈, 소셜벤처, 지역기반 연계) 는 자활기업이 중점적으로 연계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의 관점에서 지방투자보조금, 지역산업, 지역인재 채용 지원제도를 재설계하 여 지역의 혁신성장 및 일자리 거점 구축(혁신도시, 지역특구 기능 확대 등), 지역투자·사업 활성화 (미래 신성장 동력 14개 산업 등, 도시재생 뉴딜 임대주택관리, 돌봄, 집수리 등 활성화), 지역일자 리 창출을 위한 지원체계 고도화 추진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혁신도시, 신성장 동력 연관산업, 도시재생 뉴딜 및 어촌 뉴딜 등은 지역일자리 창출의 주요 전략사업으로써 사회적경제 영역이 중심 은 아니지만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진출해야 할 분야입니다. *생활 SOC 3개년 계획(19.4. 관계부 처)

(커뮤니티 케어) 정부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20대 국정전략으로 추진하고 소득보장, 건강·의료보장 등을 통해 포용적 복지국가를 완성하겠다고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고령화 사회의 노인문제는 주거, 의료, 돌봄 및 일상생활 전분야에서 통합적인 시스템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주거지원 인프라 확충) 케어안심주택 대폭 확충(19~22. 4만호)을 통해 노인들이 평소 사는 곳에서 건강관리 를 받고 각종 돌봄서비스를 받도록 추진하고 노인 거주 영구임대주택도 케어안심주택으로 전환 추 진(25. 15만호), 어르신 독립생활, 낙상방지를 위한 집수리 및 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통해 추진합니다. 그 밖에 찾아가는 방문건강 방문의료 실시(주민건강센터 건강생 활지원 등 확충, 건강관리 프로그램 활성화), 재가 장기요양 및 돌봄서비스 획기적 확충(종합재가센 터, 사회서비스원 등), 사람중심의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통합 제공(지역케어 회의 등 통합 플랫폼 구축, 어르신 돌봄 시범마을 25년 시군구별 4개 1천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공공정책 자활 연계) 일자리 정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듯 보이지만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정책이 있는데 국정과제 12. 사회적가치를 선도하는 공공기관(기재부)입니다. 더불어 잘 사는 경제 (26개)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우선위탁을 규정하고 나아가 기업의 사회적가 치 투자를 유도하는 과제으로써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사회책임경영 등을 권장합니다. 정부는 지난 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의 개정을 통해 자활기업의 우선구매 수의계약의 법적 근거를 확보했으며 한도 금액도 5천만원까지 상향시켰습니다. 계약예규 변경을 통 해 사회적경제 기업 중 취약계층 30% 이상 고용한 기업(지원대상자활기업)의 평가 시 가점도 2점 으로 상향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공적연기금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한 SRI(사회책임투자) 실적을 반영하도록 하고 국민연금 안에 사회책임투자위원회 설치, ESG 정보 공시 의무화 추진(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공 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선도) 중요한 점은 공공기관의 기관평가 시 사회적가치 투자를 의무화하고 평 가 비중을 대폭 상향한 것입니다. 전국 300여개 국가공공기관과 800여 지방공기업까지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다양한 공공조달 정책 변경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주요 추진과제는 사회적가치 투자이며 주로 일자리 창출에 있습니다. 예) '18년 LH 사회적기업 대상 청소용역 위탁, 자활과 함께 하는 코레일 주차장의 출장세차사업, 도로교통공단의 자활 참여자 면허취득 지원 등

4. 연계 전략 개발 제안

국정과제와 연계한 통합사업단(자활기업 + 자활사업단) 설치로 시너지 창출

정부정책과 자원은 전방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활기업이 가장 잘하는 영역과 가장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영역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도시재생 뉴딜에 휴먼서비스를 더하자.”는 것입니다. 사회서비스 및 사례관리 영역은 우리가 가진 큰 강점입니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희망나르미의 성공도 배달 자체 보다 휴먼서비스의 결합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재원이 투입되고 있으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 도시재생 뉴딜, 주거복지 등 정책영역에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의 휴먼서비스를 더함으로써 원활히 작동 가능해 질 것이다.

타켓시장을 결정하라!

자활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은 서로 다른 이업종간의 결합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정책과 정책을 연결하며, 자원과 자원을 연결하는 촉매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자활의 미래는 예측되지 않습니다. 그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정책 사례 (생활 SOC 등)	연계협업 시너지	연결사업
	(공익형)자활사업단+자활기업(예산사업) => 정책과제 연계	
커뮤니티 케어(42)	예) 통합돌봄 사업단 복지부 통합돌봄 정책 => 생활관리사 양성 연계	집수리, 주택관리, 돌봄, 도시락, 반찬제공
도시재생 뉴딜(79) 어촌뉴딜 300(81)	예) 마을관리 사업단 국토부 마을관리협동조합(사협) 정책 => 지역관리기업 설립	집수리, 주택관리, 돌봄, 청소, 소독·방역
환경·안전(58)	예) 미세먼지저감 사업단 교육부(교육청) 및 지자체 등 현안 예) 에너지 코디네이터 사업단 => 도시재생, 돌봄 등과 연계	실내외 청소 살수차 작업 자전거사업단
공공기관 사회적가치(12)	예) 공공자원연계 사업단 공공기관(중앙·지방·유관기관) 연계 기업 CSR 연계 사업	코레일 세차 등 도드람, GS 등

예)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태양광 설치 지원하는 태양광 에너지 사업단 등

[토론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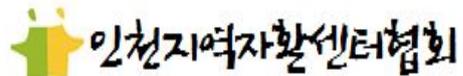
이임철

SK인천석유화학(주) DBL 정책혁신팀장

[토론 V]

김성준

인천광역시의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404호 (간석동, 인천광역시사회복지회관)

<http://www.injiwon.or.kr>

전화번호 : 032-437-4051

팩스번호 : 032-437-2002

이 메 일 : inziwon@hanmail.net
